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 진보당 정책위원회 | 국회입법조사처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02-6788-4733



PROGRAM



국회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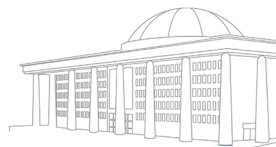
발표회 개요

-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요일) 오전 9:30~11: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진보당 정책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일정표

시 간		세부 내용
09:30-09:50	(‘20)	사회: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개회식] - 개회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환영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 -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09:50-10:20	(‘30)	[발 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연구 결과 발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10:20-10:30	(‘10)	휴식
10:30-11:30	(‘60)	[종합토론] 좌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행정학과 객원교수 •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공공정책대학 교수 •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CONTENTS



국회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

개회식

개회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iii
환영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ix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xi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xiii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xv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	xvii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xxi

[발 제]

발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연구 결과 발표	1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종합토론]

좌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행정학과 객원교수	37
토론2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공공정책대학 교수	46
토론3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5
토론4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59

개회사



개회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다섯 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원장님과 김기태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연구진들, 그리고 오늘 좌장 및 토론자로 참여해주시고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더 이상 한두 가지 지표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평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명이나 공동체도 오래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불평등은 실로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회적 과제인 셈입니다.

오늘 발표회는 국회가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평등 논의는 주로 소득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얽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라는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들여다보고 그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출발한 연구 질문은 ‘불평등에 대한 지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고 느끼는가?’였습니다. 연구 결과,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불평등에서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한 세대 동안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펴왔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금융 등 자산의 불평등의 심화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고, 정책 수단도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전체적인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된 것입니다. 부동산은 주거와 개발, 경기와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금융은 통화와 재정·투자 정책으로만 주로 인식되면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만큼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목표와 의지가 부재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데이터 접근성과 행정정보 연계의 한계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개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의 지표에 대한 조사와 통계작성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차분석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구를 위한 필수 데이터조차 익명화하여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여러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향후 국회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모든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새로운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 초기 단계에서 수 차례의 연구기획 회의와 수시로 이루어진 토론을 통해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의 첫발을 내딛어주신 연구진들의 노고가 오늘의 연구결과를 탄생시켰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의 결과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과학적 지표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

환영사



환영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야 5개 정당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격차를 넘어 주거·교육·고용·건강·돌봄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맞물려 확대되는 복합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불평등의 심화는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을 확대하고, 사회를 분절시키며 공동체의 연대를 약화시킵니다.

모두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노력의 결실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와 제도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불평등 완화’는 단지 한 분야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넘어, 교육·의료·주거·복지 전반에서 ‘기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의 설계 전반에 ‘다차원적 불평등’의

관점을 새롭게 반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평등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교육기회 확대, 돌봄·보육 강화, 고용·노동 환경 개선, 주거안정 강화, 공정경제 구축, 복지·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다차원적 불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발표될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과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한정애

환영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도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님과 연구를 수행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회가 주도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 불평등의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불평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제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일자리의 불안정 속에서,
또 누군가는 교육과 주거의 벽 앞에서 불평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며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청년과 서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삶의 기회와 미래의 희망을 가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민생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곧 정치의 중심이다”라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는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고, 결과가 정당하게 돌아가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상생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와 성장, 효율과 형평의 균형을 이루고,

공정한 시장 질서 속에서 교육·고용·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기회의 사다리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정파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김도읍

환영사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불평등과 관련하여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님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야 5개 정당이 함께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오래전부터 체감해 왔습니다.
불평등은 소득의 격차를 넘어, 자산, 교육, 건강, 성별, 지역의 차이로 이어져 국민의 삶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이동성은 약화되고,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노년층은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가 주도해 마련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수치로 드러난 불평등의 심화는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존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관점에서 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건강, 교육, 주거, 노동 등 사회적 권리를 제도
로써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낡은 제도를 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모든 차별의 집합체인 남녀 고용·임금 격차를 비롯한 구조적 불평등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가 과학적 근거 위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때, 우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정춘생

환영사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이주영입니다.

「대한민국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주관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등을 단일 지표로 재단하지 않고, 삶의 여러 차원이 얹혀 만들어내는 구조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불평등은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과 세대 간 형평성, 지역의 기회 구조, 돌봄과 시간의 빈곤, 기술 변화에 따른 격차가 상호작용하는 ‘연결된 문제’입니다.

교육 기회의 차이는 노동시장 진입과 임금 궤적을 바꾸고, 건강 격차는 노동소득과 의료비 지출을 통해 다시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의 불안정은 학습과 돌봄의 기반을 흔들며, 디지털 접근성 격차는 교육·고용·행정 서비스 이용의 격차로 되 돌아옵니다. 다차원 지수는 이러한 인과의 순환고리를 드러내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회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 구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교육, 보건, 주거, 돌봄, 디지털, 노동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설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이주영

환영사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진숙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각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등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교육,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반을 가르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세대를 가르고, 교육과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위험 신호입니다.

불평등은 이제 기후위기,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복합위기와의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불평등 해소’를 주제로 정책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민생활의 필수재가 된 에너지, 교통, 금융 등의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의 축적을 통해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과학적 진단이자, 대안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이번 연구가 통계로 그치지 않고,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길을 향해 진보당은 가장 앞에서, 가장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진숙

축 사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 주도로 처음 마련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오신 입법조사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발표회에서 발제와 토론, 좌장으로 함께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동주최로 뜻을 모아주신 5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독재와 외환위기까지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압축성장과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간에 불평등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를 개발한 것은 변화된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적극적 발걸음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불평등의 축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 지표로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의 큰 성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 이 같은 결과는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의 기회, 교육의 질, 건강 접근성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풍부한 연구와 정밀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데이터에 대한 공개와 접근성 강화, 통계 간 불일치 해소와 정밀도 제고, 정부 기관 간에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된 만큼 국회 차원의 필요한 조치들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인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조정자여야 합니다. 이번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개발이 대한민국 국회의 정책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장 우 원 식



국회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



발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연구 결과 발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연구 결과 발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I | 들어가며

불평등 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OECD(2011)은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수십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불평등의 심화는 교육, 건강,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통합도 저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강변했던 IMF나 World Bank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불평등 수준 아래에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Berg, Ostry, Tsangarides, & Yakhshilikov, 2018).

불평등의 심화는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위기 의제와도 연결된다.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인 좌·우 정당들은 70년대 이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다수의 복지국가에서 불평등은 21세기 들어서도 심화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그림 1] 참고). Piketty(2014)는 과거에는 정치적 분열이 노동자 대 자본가 사이에 있었지만, 현대에는 엘리트 그룹을 분점하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사이에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엘리트 그룹 사이의 대립 혹은 적대적 공생 속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전통적인 노동계급은 소외되면서 극우 포퓰리즘의 토대가 확대되고 있다. 노대명(2025) 역시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극우 급성장의 배경으로 불평등을 지목했다. 김병권(2024)은 현재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대규모 탄소 배출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양상은 세계적 보편성과 더불어 고유성이 있다. 한국은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국가에 의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점, 지난 2010년대 이후에는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꾸준히 완화됐다는 점([그림 1] 참고), 후발 복지국가로서 다수의 제도가 도입·안착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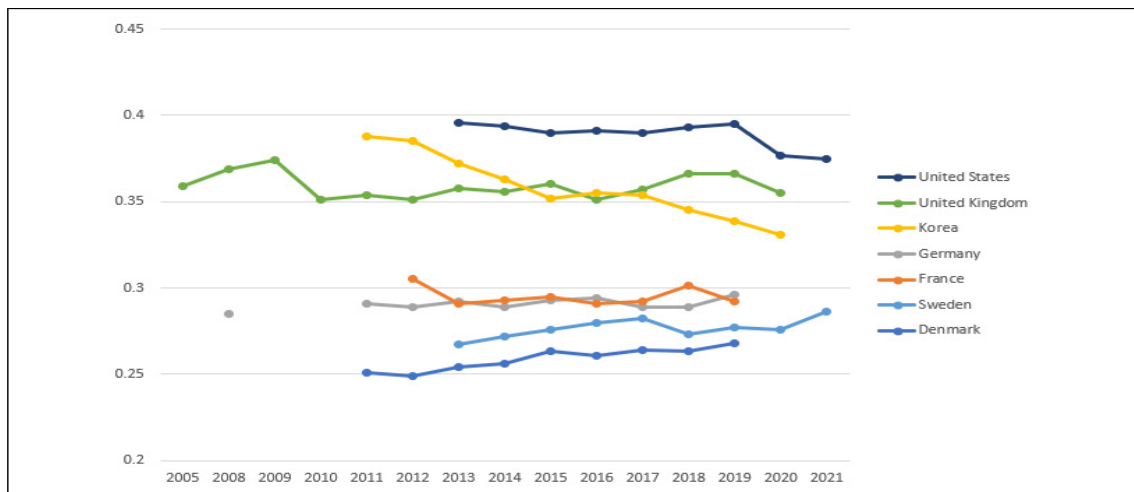
복지국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 수준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2) 참고).

특히, 성별, 연령의 관점에 본 한국의 불평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를테면, 노인 빈곤율 및 남녀 소득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렇듯 불평등의 단면을 달리 보면, 다른 차원의 불평등 양상이 새로이 관찰된다. 해외에서도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소득, 교육, 건강(Kelly, 2006; Lugo, 2005), 소득을 제외한 주거, 교육, 건강(Araar, 2009), 소득, 소비, 자산(Wroński, 2021)을 포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됐다.

국내에서의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백승주, 금현섭(2013)이 소득·교육·건강의 세 차원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차원별 기여도를 산출한 바 있다.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이 소득, 교육, 건강, 주거자산의 맥락에서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두 논문의 선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넘은 연구이며, 일회성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점과는 대조적이다(Barbabela et al., 2022; Foster & Lokshi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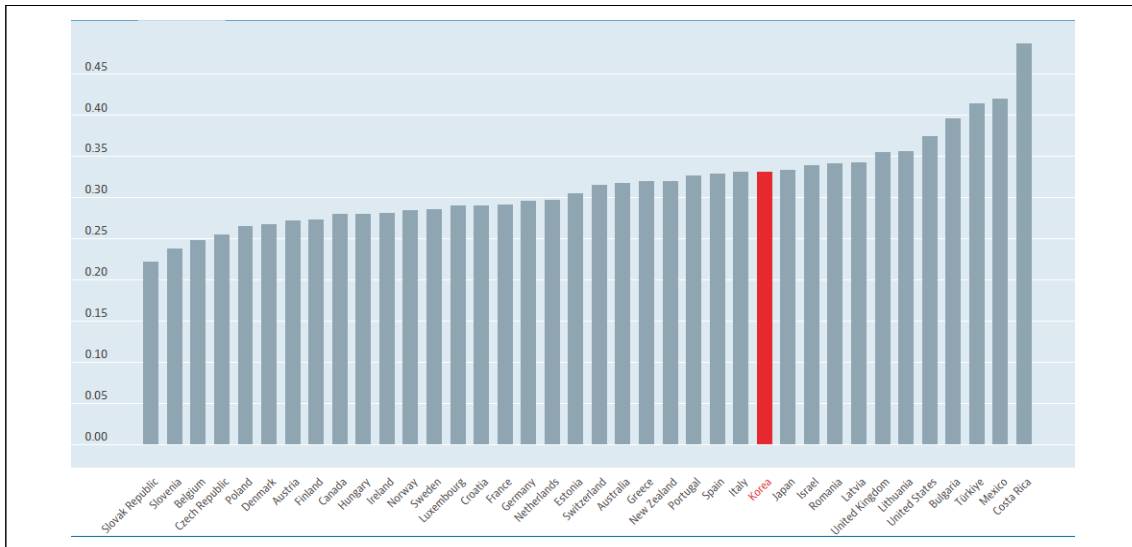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의 양상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네가지 영역, 즉 소득, 자산, 교육, 건강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고,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양상의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에 관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그림 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추이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각 년도.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그림 2] 한국과 OECD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주: 국가별로 기준 시점은 상이하며 2018~2021년 사이에 분포함. 한국은 2020년 기준이며 지니계수는 0.331임.

자료: OECD, 「Income Inequality」.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II | 불평등의 다차원성 검토

1.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 및 연구의 필요성

불평등 연구는 전통적으로 단일 차원 지표, 주로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Araar, 2009). 개발도상국 대상 불평등 연구에서 복지의 다차원적 특성을 인정하는 분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Araar, 2009).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복지국가에서의 불평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로 등장했다. 다수의 재화와 서비스가 쉽게 화폐화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행복이나 기대수명과 같은 비화폐적 측면이 중요한 선진국에서도 그러하다(Araar, 2009).

Sen(1982)에 의한 역량이론은 다차원 불평등 개념에 증대한 기여를 했다(Araar, 2009 재인용). Sen의 이론은 자원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의 이점을 평가할 것을 강조하며, 단순한 자원 보유 수준을 넘어서 개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와 역량에 초점을 둔다(Sen, 1982; Araar, 2009 재인용).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후생 수준은 심각하게 떨어질뿐더러, 앞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화폐적 차원의 분포에 존재하는 불평등 자체를 측정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그 분배가 불균등하다면 전반적인 복지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Araar, 2009). 이러한 관점은 개인 복지가 다면적이며, 물질적 생활 수준은 그중 하나일 뿐이며, 비화폐적 차원은 화폐의 차원과 자주 무관함을 의미한다.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화는 복지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건강, 심리적 차원을 포괄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Barbabela et al., 2022). 이러한 확대된 관점에 따르면 다음의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모든 형태의 불평등이 단일한 근저에 있는 하나의 차원의 표현인가? 따라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평등하거나 불평등한가? 혹은 서로 다른 불평등 차원들이 서로 무관하며 상이한 요인에 의해 구동되는가? 나아가 사회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가? 즉,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평등성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가? (Barbabela et al., 2022, p. 45). 화폐 중심의 불평등 이론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결과, 불평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의 장이 열리면서, 동시에 질문은 꼬리를 물게 됐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다차원 불평등의 양상 및 상호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다양한 불평등들이 서로 인과 및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① 핵심 불평등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즉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면 다른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② 개별 불평등 문제를 서로 독립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인 해결 방식을 취하거나, ③ ①~②의 중간 정도에서 혹은 ④ 제 3의 방식의, 학술적 분석 혹은 정책적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한 접근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득 중심 사고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다.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된 지표가 1인당 GDP 등 소득이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에서 교육, 건강, 관계 등 비물질적 차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인도계 후생경제학자인 Amartya Sen이 있다. 앞서 논의한 Sen(1980)의 역량이론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도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개발로 이어졌다(Sen, Anand, 1994). 인간개발지수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GDP만으로 가늠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회의 성원들의 건강 및 교육, 소득 수준을 종합해서 반영한 결과물이다. Stiglitz, Sen, Fitoussi(2009)가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인간의 웰빙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p. 14)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두 여덟 개의 차원이 “동시에(simultaneously)” (p. 14)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여덟 개 차원은 ① 물

질적 생활 수준(소득, 소비 및 부), ② 건강, ③ 교육, ④ 개인 활동(일 포함), ⑤ 정치적 목소리와 거버넌스, ⑥ 사회적 연결과 관계, ⑦ 환경(현재와 미래 조건), ⑧ 경제적 및 신체적 불안정성으로 제시됐다.

OECD(2011)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로 제시한 ‘Better Life Index’에서도¹⁾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로 다음의 11가지를 제시했다. ① 소득 및 부, ② 직업 및 소득, ③ 주거 조건(Housing Conditions), ④ 건강 상태, ⑤ 일과 삶의 균형, ⑥ 교육 및 기술, ⑦ 사회적 연결, ⑧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⑨ 환경 품질(Environmental Quality), ⑩ 개인 안전, ⑪ 주관적 웰빙이다. 불평등의 측정에서도 이러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과 다른 지표와의 비동조화도 관찰된다. 과거에는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일한 변수로서 의미가 컸다.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과 건강 등 다른 지표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 평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른 지표와의 비동조화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유명한 ‘Easterlin Paradox’나 ‘Wilkinson hypothesis’다. Easterlin Paradox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행복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과 소득의 성장을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Easterlin, O'Connor, 2020). 이러한 주장도 분석 대상 국가, 분석 자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Stevenson, Wolfes, 2008), 과거 고도성장 사회 특유의 소득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데 일조한 역할이 크다. Easterlin의 역설은 인간의 삶에서 비경제적 요인, 즉 사회적 신뢰나 건강, 환경의 요소를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 Wilkinson의 가설도 크게 보면, Easterlin Paradox와 유사하다. Wilkinson & Pickett(2009)는 국가 간 국제 비교 및 미국 주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소득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건강 결과 사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 수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제언이었다. 이러한 가설에 반하는 분석(Baek & Kim, 2018)도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길이 소득 증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셋째,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돌봄이나 외로움과 같은 관계의 의제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관심은 이른바 ‘구사회적 위

1) OECD(2011)도 ‘Better Life Index’의 생성에서 “Stiglitz et al. (2009)의 제안에 밀접하게 의존”(p. 18)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상병, 실업, 은퇴, 산재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공통점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결국 위험에서 비롯되는 빈곤화를 막거나, 이미 빈곤해진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21세기에 들어선 복지국가는 돌봄, 고립, 은둔, 외로움, 관계 단절 등과 같은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성 노동 시장 진출 증가,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돌봄 및 여가 수요 충족 기능의 저하다. 둘째, 생리적 욕구 및 경제적 안정 욕구가 보장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사회적 욕구 및 존경 욕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Maslow(1943)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다섯가지 욕구(생리적 욕구, 신체적·경제적 안정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선행 욕구가 충족돼야 후행욕구를 순서대로 충족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인정 혹은 관계 문제는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는 참여, 돌봄, 외로움과 같은 보다 미세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적인 불평등을 주목하는 대신, 다차원적 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불평등의 기저에 작용하는 동적인, 그리고 인과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을 결과로 본다면,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확대 혹은 감소를 초래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건강, 교육, 노동, 성별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의 순환 고리를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다차원 불평등의 이론적 총합에서 어느 차원의 불평등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불평등이 특정 인구집단에 중복적으로 누적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개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킥핀'을 찾아야 하는 필요와 직결된다.

다섯째, 다차원적 불평등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양한 불평등 지표들을 묶어서 단일 지수화함으로써, 전체 불평등의 양상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은 욕구와 연관된다. 앞서 살펴본 인간개발지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견해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다차원적인 현실을 1차원적인 하나의 지수로 요약하려는 지표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불투명성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 소득 불평등, 의료, 교육 등등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Piketty, 2014, pp. 52-53).

다차원 불평등 개념을 활용한 접근이 가질 잠재적인 한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불평등이 분산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평등의 동적인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빈곤이나 사회적 이동 개념이 불평등의 대물림, 악화, 확대, 악순환을 분석하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에 적절할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다차원 뒤에 붙는 개념이 불평등일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불평등의 어떠한 면모에 학술적·정책적인 관심이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혹은, 다차원 불평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면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역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역별 불평등 현황 및 추이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관찰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분석은 다차원 분석을 위한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유럽 등 다른 복지국가와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다차원적 불평등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생산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2. 다차원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Bersisa & Heshmati(2021)는 에티오피아에서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의 단일·다차원 빈곤과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소비지출, 교육, 건강, 주거, 자산, 에너지 총 6개의 차원을 다중대응분석(MCA)을 통해 영역별로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단일 차원 기준으로는 36%가 빈곤층이었으나, 다차원 기준으로는 80%가 빈곤층이었다. 농촌(89%)이 도시(43%)보다 훨씬 높은 다차원 빈곤 수준을 보였으며,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보다 빈곤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필자는 보편적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지역 및 인구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roński(2021)는 EU 21개국의 소득, 자산,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차원 불평등을 측정했다. HFCS(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자료를 사용하고, Araar(2009)의 지수를 적용하여 각 차원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했다(Wroński, 2021, p.573, 591).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불평등이 전체 다차원 불평등에서 가장 큰 기여(49~60%)를 했고, 다음이 소득, 소비 순이었다. 전반적 다

차원 불평등의 국가 간 차이는 미미했으며, 단일 차원의 지니계수보다는 차이가 작았다. 가구의 소득, 자산, 소비 위치 간 상관성은 국가마다 상이했으며, 자가 소유율, 중간소득 수준, 단일 불평등 수준과 연관이 있었다.

Barbabela, Pellicer, and Wegner(2022)는 98개국을 대상으로 다차원 불평등 구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들은 WIID(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의 소득 불평등 자료, WHO 생명표의 건강 불평등(기대수명), 그리고 국제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 참여, 정치적 영향력 인식, 자기효능감, 사회계층 인식에 대한 불평등을 통합하였다. 모든 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측정하면서, 주성분분석(PCA)을 통해 불평등의 근본 축을 추출했다. 이들은 크게 보아, 다음의 두가지 차원의 불평등의 근본 축을 판별했다. 두가지는 사회경제·심리·건강 불평등(소득, 건강, 사회계층, 자기효능감 간의 강한 연관관을 보이며 전체 변동의 절반가량을 설명)과 정치적 불평등(정치 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에서의 불평등을 반영)이었다. 분석 대상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다차원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백승주, 금현섭(2013)과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이 국내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유이한’ 사례다. 두 논문 모두 복지패널을 사용했다. 백승주, 금현섭(2013)은 소득, 교육, 건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이론적 지수들(Maasoumi, Bourguignon, Araar)을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구성 차원별 기여도는 서로 상이하였다. 정해식 외 (2014)는 다차원 불평등을 세대 간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이들은 노인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로 구분하고, 소득, 교육, 건강, 주거자산 네 차원을 기준으로 Araar(2009)의 지수를 활용한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논문의 자료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선행연구의 자료 및 분석 개요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백승주, 금현섭(2013)
데이터		• 복지패널	• 복지패널
데이터 선택의 이유		소득, 교육, 건강, 주거 “네 차원의 관련 변수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 상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시” (p. 348)	“소득, 교육,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 대한 조사문항이 동시에 포함된 자료”(p. 294)
영역	소득	•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연, 만원)	• 가구의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 가구원에게는 근로(사업)소득만
	교육	• 교육년수	• 교육년수(year of schooling)
	건강	• 건강만족도, 우울척도, 음주, 장애, 만성질환을 최소최대 정규화한 뒤 산술평균	•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건강만족도, 심리적 건강으로서 우울척도(CESD-11), 음주수준, 장애 등급, 만성질환. • 다중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단일값 산출
	주거	• 주거자산으로 거주주택 가격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또는 보증금)	• 주거는 포함하지 않음.
다차원의 정규화 과정		• 상이한 불평등 지표를 정규화. 최소-최대 정규화 (Min-Max Normalisation Methods) ※ 극단값 제거 위해 99%값 활용	왼쪽과 동일. ※ 극단값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결론		• 소득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노인세대는 소득, 교육, 건강의 차원에서 가장 낮은 자원 수준을 보임 • 세대별 다차원적 불평등 기여도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교육 차원,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과 건강 차원,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주거자산 차원이 불평등에의 기여 정도가 높음	• 다차원 불평등 지수 2005~2011년 감소 추이 • 소득 불평등의 기여도가 절반 가까이로 높음 • 지역으로 나눠보면, 도시에서 건강 불평등 기여도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III | 다차원 불평등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분석의 자료는 복지패널을 활용했다. 복지패널은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를 평가” (한국복지패널, n.d.)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단위로 수집된 패널자료다. 가구용/가구원용/부가조사표로 나뉘어서 조사가 수행되며, 가구용 조사표를 보면, 가구 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험 가입/퇴직금제/개인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및 이자, 가구 재산, 생활여건 등 거의 대부분의 불평등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다차원 불평등을 분석한 두 차례의 선행연구(백승주, 금현섭, 2013; 정해식 외, 2015)에서 복지패널을 사용한 이유도 복지패널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진에서도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자료 및 행정자료의 연계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했으나,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복지패널을 능가하는 자료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석 시기는 2011년부터 2023년의 13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했다. 2025년 분석 수행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는 2024년에 실시된 19차 복지패널 데이터다. 참고로, 2024년 수행된 19차 복지패널 자료는 대부분 전해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대상의 시기는 복지패널 7~19차의 2011년~2023년이다.

분석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이전 국내 선행연구에는 모두 15세 이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백승주, 금현섭, 2013 등),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생 연령대 개인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교육연수가 교육 불평등의 지표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민법에서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점도 참고했다.

세대 구분은 2025년 기준으로 60년 이전 출생자, 즉 65세 이상 인구는 노인세대로, 그 아래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586세대(61~70년생), X세대(71~80년생), 밀레니얼 세대(81~90년생), Z세대(91년 이후 출생)로 구분했다. 이들은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한국의 성장과 불평등의 국면을 다르게 맞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 한국의 세대별 사회경제적 변화 추이

(단위: 기간 평균, %)

차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경제성장률	10.27	8.64	6.68	4.43	4.0
실업률	4.00	3.51	3.47	3.62	3.31
임금상승률	8.87	9.07	4.85	3.94	-
주택가격 상승률	-	8.05	0.68	5.36	2.93
사회경제적 사건	독재정권 빈곤탈출	민주화운동 고도성장	외환위기 OECD 가입	민주화 불평등심화	저출생 저성장진입
교육 및 복지제도	의료보험 도입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도입	고용보험 도입 국기초 도입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무상급식 실시

주: 정해식 외(2015) 표 1의 내용 일부 수정함

2. 변수의 측정

소득은 균등화가구가처분소득을 활용했다. 분석의 대상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균등화과정에서는 19세 미만 가구원도 포함했다. 교육 변수는 교육연수

를 활용했다. 개인별로 최종 졸업한 학교까지 누적 교육 연수에 현재 추가 교육 과정 학적 상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교육 연수를 구했다. 여기서 가중치는 재학·휴학·중퇴는 0.5²⁾, 수료는 0.7, 졸업은 1.0이다. 이를테면, 대학 중퇴의 경우, 교육연수는 14년(초등6년 + 중등 3년 + 고등 3년 + 대학 2년)이다.

건강 차원에서는 네가지 변수를 활용했다. ① 주관적 건강 수준, ② 우울 정도, ③ 음주, ④ 만성질환을 활용했다³⁾. 네가지 변수가 모두 서열적 범주형 변수이고, 수치적 순서가 명확한 점을 고려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건강차원의 종합지수를 생성했다. 물론, Araar(2009)나 백승주, 금현섭(2013)은 복수의 범주형 변수를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위해 활용할 때,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해서 분석 단위의 효용점수(utility score)를 산출했다. 이번 연구는 네가지 변수가 위계적 서열 변수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했다.

자산의 경우, 균등화가구 순자산(net wealth)을 활용했다. OECD(2015)에 따르면, 자산 지표의 활용에서 “불평등 지표는 순자산(net wealth)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유의미하다”(p. 170). 총자산(gross assets)은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모두 포함하나, 그 자산이 부채로 상쇄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은 왜곡된다. 예컨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총자산은 높지만, 거액의 모기지 부채가 있으면 실질적 경제력은 크지 않다. 복지패널에서 순자산을 분석에서 활용한 박호준, 박정민(2021)의 사례도 참고했다. 다만, 이들은 복지패널 자산 및 부채 항목을 구하는 산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는 복지패널에서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자산 등 25개 항목을 합한 값)에서 총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다. 모든 자산값은 양수였다.

복지패널에서 가구의 부채액은 ① 금융기관 대출액,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 ④ 전세보증금, ⑤ 외상 및 미리 받은 젃돈, ⑥ 기타 부채를 합해서 산출했다. 모든 부채액도 양수였다.

분석 과정에서 극단치가 발견됐다. 소득과 재산 자료는 극단치가 흔하게 발견된다(OECD, 2013). 이러한 극단치는 극단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인지, 이상치인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극단치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연

2) 정해식 외(2015)는 중퇴에 0.7 가중치를 주고, 백승주, 금현섭(2013)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중퇴가 휴학과 재학과 다를 이유가 없어서 중퇴는 0.5로 간주했다.

3) 정해식 외(2015), 백승주, 금현섭(2013)은 모두 장애등급을 건강 변수로 활용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19차 복지패널 자료를 보면, 장애가 있는 개인의 비율은 6.75%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두 선행연구에서는 흡연도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구에는 대체로 남겨졌다. 이유는 두 가지다. 소득과 자산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에는 일부 극단치가 있었지만, 모두 남겼다. 복지패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균등화소득수준은 평균치의 81.7배였다.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극단값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복지패널 2차에서는 총자산액이 6000억원인 극단값이 존재했다. 물론, 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하나의 사례가 전체 평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 불평등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단 혹은 상단 코드를 설정해서 계산식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극단값 대체 기법(winsoring)을 사용한다(LIS Datacenter, n.d.). 이번 연구에서는 가구 자산 및 부채에 한해서 상위 1%에 한해서 1%의 경계값을 부여했다(〈표 VI-3〉 참고). 순자산의 경우, 상하위 1%에 대해서 각각 1%의 경계값을 부여했다. 자산과 부채는 하한값이 0인데 비해, 균등화가구순자산은 최소값도 -10억을 밑돌았기 때문이었다.

[표 3] 연도별 가구균등화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상위 1% 경계값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9.26	9.06	9.33	9.22	9.90	10.59	12.08	11.55	13.00	16.15	16.86	19.68	16.63
부채	2.48	2.35	2.50	3.41	3.46	3.49	3.45	3.75	4.05	4.47	5.02	4.91	5.01

[표 4] 불평등 차원별 변수의 측정 및 기초 통계량 (2023년 기준)

차원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소득	• 균등화가구가 처분소득 (단위: 연기준 만원)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4395.62 ¹⁾ (2685.62)	0/35,105.21
교육	• 교육 과정 및 학적(學籍) 상태에 따른 교육 추정 기간 (단위: 년)	• 개인별로 최종 졸업한 학교까지 누적 교육 연수 + 현재 추가 교육 과정 학적 상태에 따른 가중 연수 ※ 재학·휴학·중퇴는 0.5, 수료는 0.7, 졸업은 1.0 가중	12.76 (3.63)	0/22
건강	• 주관적 건강	• 건강만족도 (1.건강 아주 안 좋음 ~ 5. 건강 아주 좋음)	3.67 (0.86)	1/5
	• 우울 정도	• 식욕이 없음 등 11개 문항 1(극히 드물었다)~4(대부분 그랬다) 가운데 부정 정서를 묻는 아홉 문항은 역코딩함 ※ 합계 점수가 높으면 건강.	41.16 (4.03)	11/44

차원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 건강행동 (음주 수준)	• 음주 횟수 (1:주4회이상 ~ 5:전혀 안마심) ※ 점수가 높으면 건강이 좋도록 코딩 조정.	3.78 (1.30)	1/5
	• 만성질환	• 0: 비해당~: 3: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역코딩함. ※ 점수가 높으면 건강	1.64 (1.46)	0/3
자산	• 균등화 가구 순자산(만원)	• 균등화가구 총자산: 복지패널에서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자산 등 25개 항목을 합한 값.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16,134.25 (32563.34) (1%값 대체 이후) 15495.32 (27999.05)	(1%값 대체 이전) 0/501,748.8 (1%값 대체 이후) 0/166262
		• 균등화가구 총부채: ① 금융기관 대출액,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 ④ 전세보증금, ⑤ 외상 및 미리 받은 갯돈, ⑥ 기타 부채를 합해서 산출.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5,142.92 (11,286.89) (1%값 대체 이후) 4,857.40 (8,770.75)	(1%값 대체 이전) 0/191,000 (1%값 대체 이후) 0/50,079.36
		• 균등화 가구 순자산: 균등화가구 총자산 - 균등화가구총부채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상위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10,991.33 (28,696.23) (1%값 대체 이후) 10,456.79 (23,763.42)	(1%값 대체 이전) -101769.5 /501748.8 (1%값 대체 이후) -19026 /140954.3

주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은 모든 연령대의 가구원을 포함해서 산출했으나, 평균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은 조사 대상인 19세 이상의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의 평균액이다

3. 분석 방법

다차원 불평등(Multidimensional Inequality)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은 Araar(2009) 등의 다차원 지니계수 방식과 Chakravarty et al. (1998) 등의 지표 평균 접근법, 그리고 Theil·GE(Generalized Entropy) 계열의 불평등지수를 다차원화한 다차원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Multidimensional Generalized Entropy Index) 등이 있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 등으로 단일하게 이해되던 불평등지표를 교육, 건강, 주거 등에 걸쳐 측정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를 사용한다. 다차원 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위있는 지수인 점을 고려했다. Araar(2009)

는 상대적/절대적 불평등, 소득 및 비화폐적 차원, 차원 간 상관성(CIM) 등을 반영한 혼합형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제안했다. Araar(2009)가 제안한 혼합형 다차원 불평등지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I = \sum_{k=1}^K \varphi_k [\lambda_k I_k + (1 - \lambda_k) C_k]$$

φ_k = 차원 k에 기인한 가중치

λ_k = 차원 사이의 민감도

I_k = 차원 k의 지니계수

C_k = 소득 분포에 대한 차원 k의 집중지수

I = 지수의 총합으로 산출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산출식을 하나씩 풀어보자. I_k 는 구성요소 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다. 이를테면, 건강 불평등을 지니계수로 표현한 것이다. C_k 는 구성요소 k의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다. 해당 구성요소의 값이 소득 순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한다. 예컨대 부유할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건강한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λ_k 는 구성요소별 불평등과 소득(또는 순위) 불평등 간의 사회적 민감도를 반영한다. λ_k 가 1에 가까우면 I_k 에 더 민감함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구성요소 기반 평가를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λ_k 이 0에 가까우면, C_k 에 더 민감함을 의미하고, 소득 기반 평가가 강조된다. φ_k 는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해 특정 차원에 부여하는 가중치다. 이를테면, 전체 다차원 불평등에서 건강 불평등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크다고 하면, 전체 다차원지수 산출 과정에서 $\varphi_{\text{건강}}$ 의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차원에 가중을 둘 근거가 따로 제기된 바가 없으면, 영역별 가중치를 동등하게 부여했다. 식에 따르면, 한 차원의 불평등이 감소하면 다른 차원의 불평등이 일정할 경우, 전체 지수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차원간 소득 불평등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면 C_k 가 증가하면서, 전체 H-MDI도 증가하게 된다.

IV | 다차원 불평등 분석 결과

1. 차원별 불평등 정도

[표 5] 차원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단위: 지니계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	0.31	0.31	0.33	0.32	0.36	0.31	0.30	0.30	0.29	0.29	0.30	0.29	0.30
교육	0.15	0.15	0.15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3
건강	0.13	0.12	0.13	0.13	0.12	0.13	0.12	0.13	0.13	0.13	0.13	0.13	0.12
자산	0.23	0.22	0.21	0.23	0.25	0.26	0.27	0.27	0.29	0.32	0.34	0.35	0.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차원별 불평등의 정도 및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5〉 참고). 소득, 교육, 건강은 2011~2023년 기간 동안 모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산의 지니계수는 경향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그려진다. 소득의 경우, 앞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복지패널에서는 완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두 자료 모두에서 서구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의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15로 매우 낮았다. 원 보고서의 5장의 분석을 보면, 세대 간 교육연수 격차는 크게 완화되어 양적 불평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1980년대생 이후에 양적 불평등은 상당히 해소됐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였다. 교육의 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가용한 데이터가 있고, 이를 측정했다면 교육 불평등의 양상은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 불평등 수준도 다른 영역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부분 역시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건강 불평등의 지니계수가 낮았던 배경에는 건강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의 폭이 넓지 않았던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건강에서 주관적 건강이나 음주 횟수는 5점 척도를 활용했다. 건강 수준이 좋아도 소득과 같은 극단치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참고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패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균등화소득수준은 평균치의 81.7배였다. 그렇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의 최대값은 5점이고, 평균값은 3.67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니계수를 영역별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표 5〉에서 지니계수는 영역별로 추이를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관찰된다.

2. 차원 간 상관관계 추이

다음으로 차원 간 상관관계의 추이를 분석했다. 모든 조합에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 차원의 불평등이 다른 차원과 별도로 생성되고, 재생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일한 예외가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였다.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2010년대에는 상관계수가 낮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즉,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건강한 경향이 약하게 있었지만, 반대로 건강이 안좋을수록 자산은 더 많은 경향도 일부 관찰됐다.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노인 가구에서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참고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과 소득은 균등화한 자산 및 소득의 값을 개인에게 부여한 결과였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표 6] 차원간 상관관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교육	0.36	0.36	0.31	0.24	0.13	0.30	0.33	0.30	0.34	0.35	0.31	0.39	0.37
소득/교육(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득/건강	0.28	0.27	0.24	0.20	0.08	0.25	0.27	0.25	0.26	0.29	0.27	0.34	0.32
소득/건강(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득/자산	0.38	0.37	0.29	0.25	0.11	0.31	0.32	0.30	0.34	0.25	0.31	0.33	0.30
소득/자산(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건강	0.51	0.50	0.52	0.49	0.49	0.49	0.48	0.48	0.48	0.45	0.46	0.48	0.47
교육/건강(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자산	0.07	0.08	0.08	0.07	0.06	0.07	0.08	0.09	0.08	0.09	0.05	0.02	0.07
교육/자산(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0.00
건강/자산	0.03	0.04	0.04	0.05	0.04	0.02	0.05	0.03	0.02	0.04	-0.01	-0.06	0.04
건강/자산(p)	0.00	0.00	0.00	0.00	0.00	0.07	0.00	0.00	0.05	0.00	0.51	0.00	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3. 다차원 불평등 추이 및 차원별 기여도

다음으로 네가지 차원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에 근거해서 산출했다. MDI 지수는 지난 2011년 0.176에서 경향적으로 증가해서 2023년에는 0.190까지 증가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산출에서 영역별 불평등 및 소득과의 집중계수가 기여한 정도를 보면, 소득, 교육, 건강 세가지 영역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한 반면, 자산의 기여도가 유일하게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의 기여는 38.9%에서 35.2%로, 교육은 20.9%에서 16.0%로, 건강은 14.7%에

서 13.1%로 줄었다. <표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 영역에서 지니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감소한 경향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값에 미치는 기여도는 12년 사이에 25.5%에서 35.8%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증가는 자산불평등 심화가 주된 원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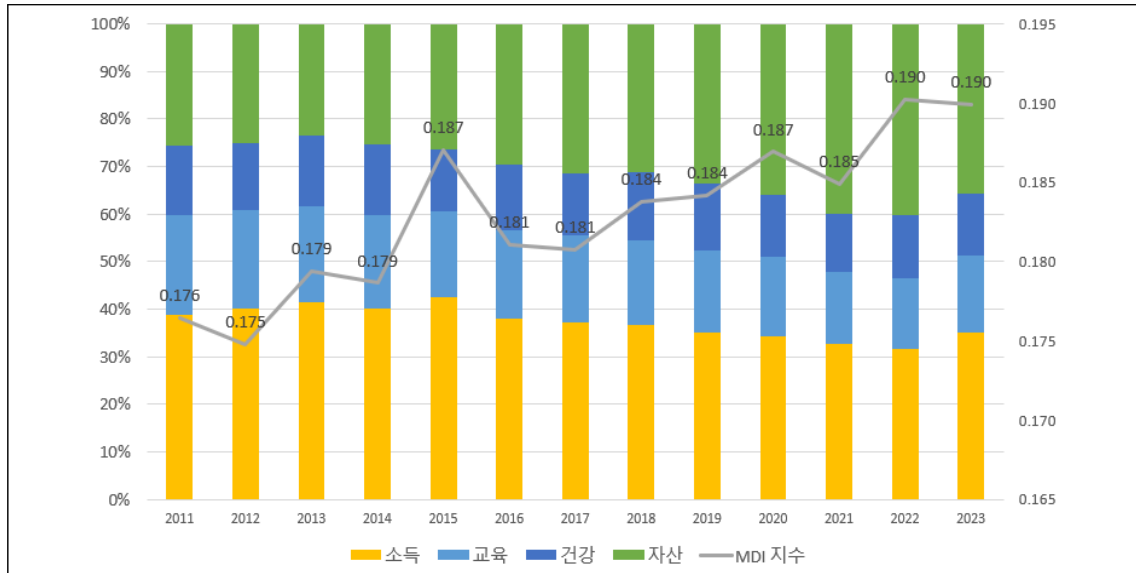
[표 7]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76	0.175	0.179	0.179	0.187	0.181	0.181	0.184	0.184	0.187	0.185	0.190	0.190
소득	38.9	40.1	41.6	40.3	42.6	38.1	37.4	36.8	35.2	34.3	32.7	31.7	35.2
교육	20.9	20.8	20.2	19.4	18.1	18.6	18.1	17.8	17.2	16.7	15.2	14.9	16.0
건강	14.7	14.2	14.7	14.9	13.0	13.8	13.2	14.2	14.0	13.2	12.1	13.2	13.1
자산	25.5	25.0	23.6	25.4	26.3	29.6	31.3	31.2	33.6	35.8	40.0	40.3	3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3]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4.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

다음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분석 대상 시기 동안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일관되게 0.2 수준을 넘어섰다. 노인 세대에서 다차

원 불평등의 기여도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자산(31.9%)과 소득(31.5%)의 비중이 높았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교육(24.2%)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세대보다 한세대 어린 연령대인 586세대에서 교육의 기여도가 절반 수준인 13.0%인 점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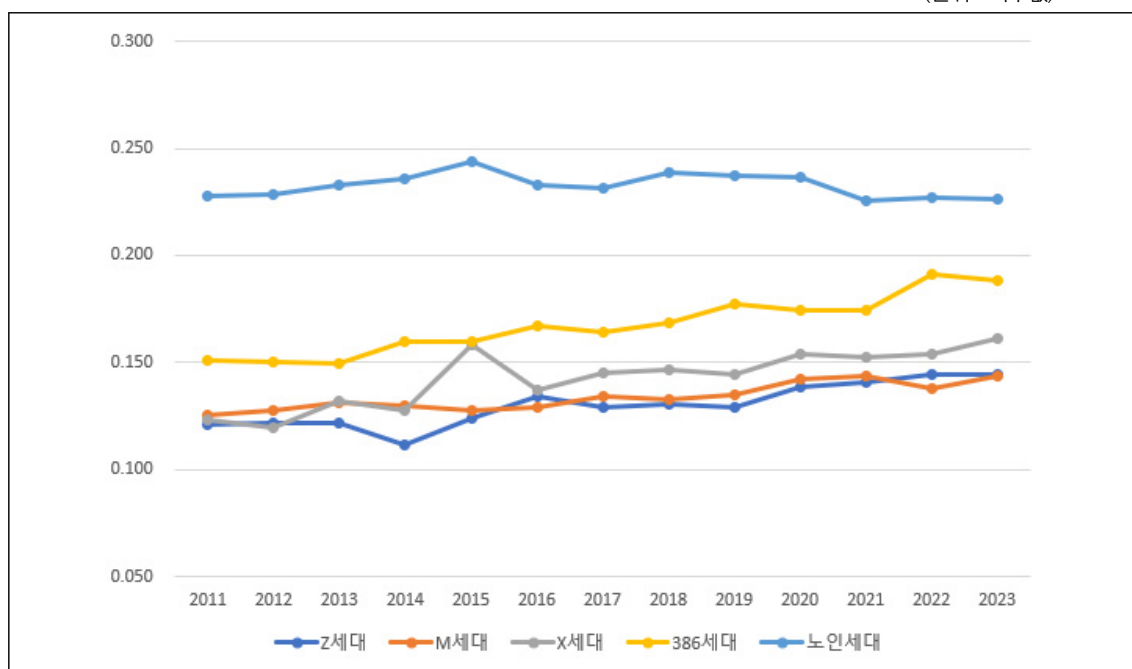
[표 8]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Z세대	0.121	0.122	0.122	0.111	0.124	0.134	0.129	0.131	0.129	0.139	0.141	0.144	0.145
M세대	0.125	0.127	0.131	0.130	0.128	0.129	0.134	0.133	0.135	0.142	0.144	0.138	0.144
X세대	0.123	0.120	0.132	0.128	0.158	0.137	0.145	0.146	0.145	0.154	0.152	0.154	0.161
586세대	0.151	0.150	0.149	0.160	0.160	0.167	0.164	0.168	0.177	0.174	0.174	0.191	0.188
노인세대	0.228	0.228	0.233	0.236	0.244	0.233	0.232	0.239	0.237	0.237	0.226	0.227	0.2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4]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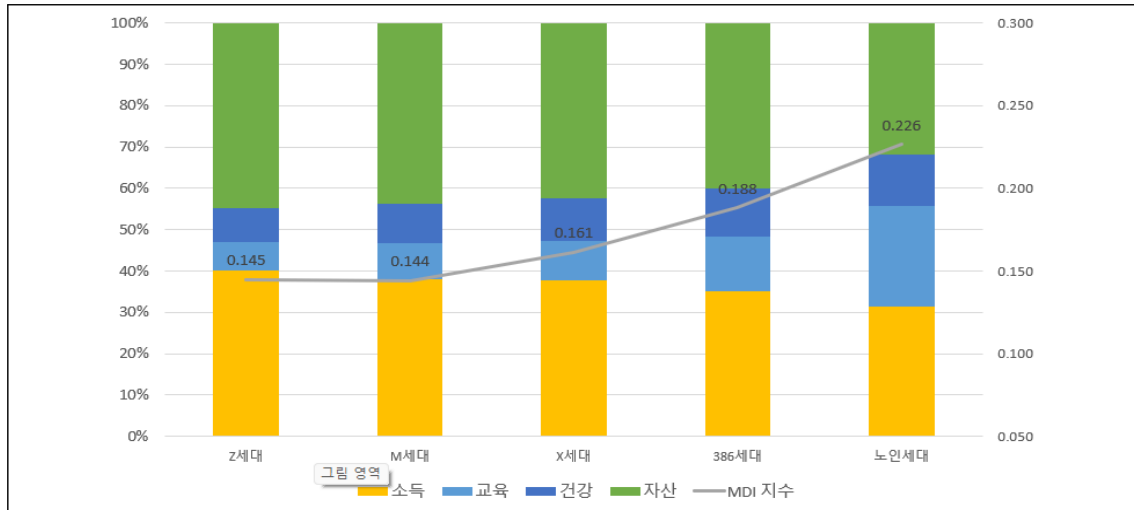
(단위: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5]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2023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노인 세대 가운데 가장 어린 1960년생이 대학을 입학할 즈음인 1980년 대학진학률이 11.4%였지만, 10년과 20년이 각각 지난 1990년과 2000년에는 비율이 23.6%와 52.5%로 두배씩 늘어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국가데이터처, 2025). 양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매우 빠르게 해소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보고서의 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노인 세대 다음으로는 586세대에서 불평등 지수가 높았다. 이들 세대는 X세대와 더불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차원 불평등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특징을 나타낸다. 두 세대는 2011~2023년 사이 지수가 각각 0.037과 0.038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세대의 지수는 0.002 감소했다. 다른 젊은 세대에서는 지수가 완만하게 증가했다. 젊은 세대에서는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교육과 건강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소득과 자산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여도가 상대적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는 있다.

5.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다음으로 세대별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먼저 가장 젊은 Z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21에서 0.145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지수는 2014년까지는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차원별 기여도의 추이를 보면, 소득은 일정한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유지됐다. 자산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자산의 낙폭이 큰 편이었는데,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등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은 가구 균등화한 값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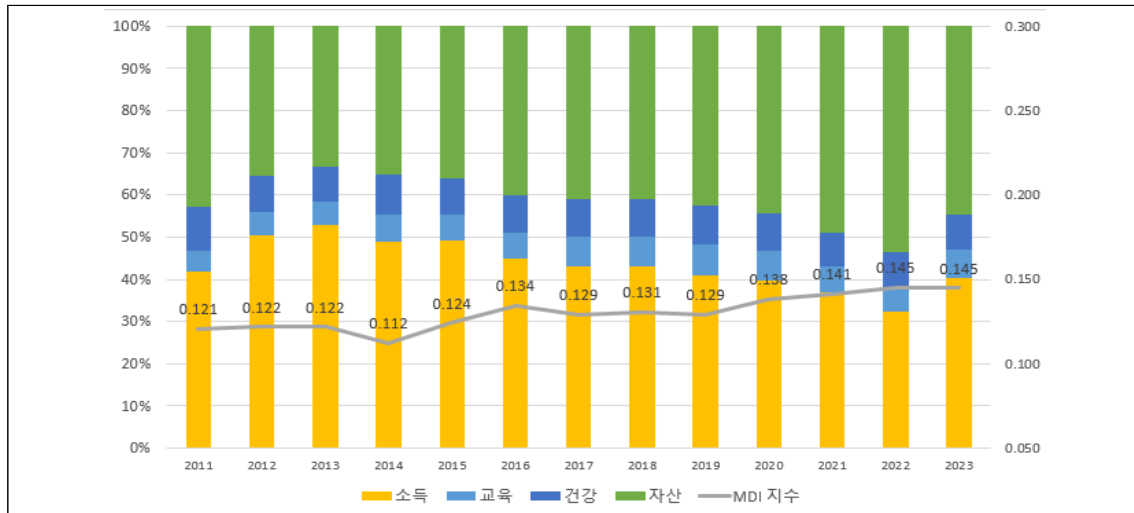
(1) Z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1	0.122	0.122	0.112	0.124	0.134	0.129	0.131	0.129	0.138	0.141	0.145	0.145
소득	41.7	50.4	52.9	49.0	49.3	44.8	43.0	43.0	41.0	39.8	37.0	32.4	40.2
교육	5.1	5.6	5.4	6.2	6.1	6.3	7.1	7.2	7.4	7.0	6.1	5.7	6.9
건강	10.4	8.4	8.4	9.7	8.5	8.7	9.1	8.7	9.1	8.8	7.8	8.4	8.2
자산	42.8	35.6	33.3	35.1	36.1	40.1	40.9	41.1	42.5	44.4	49.1	53.5	4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6] Z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2) M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M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도 살펴봤다. 여기서 M세대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로 81~90년 출생 세대다. 2025년 기준으로는 나이가 만 35~44세의 중년 세대다. 지난 15년 사이 경제적인 독립이나 가구 분리와 같은 경험이 가장 자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다. 그럼에도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018 상승했다.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지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교육과 건강이 기여도는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됐다. 특징적인 점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소득의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산의 기여도는 늘었다는 점이다. 불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소득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자산에서의 불평등 심화가 상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노동시

장 소득 분배 및 이전 및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꾸준히 완화했던 결과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결과가 M세대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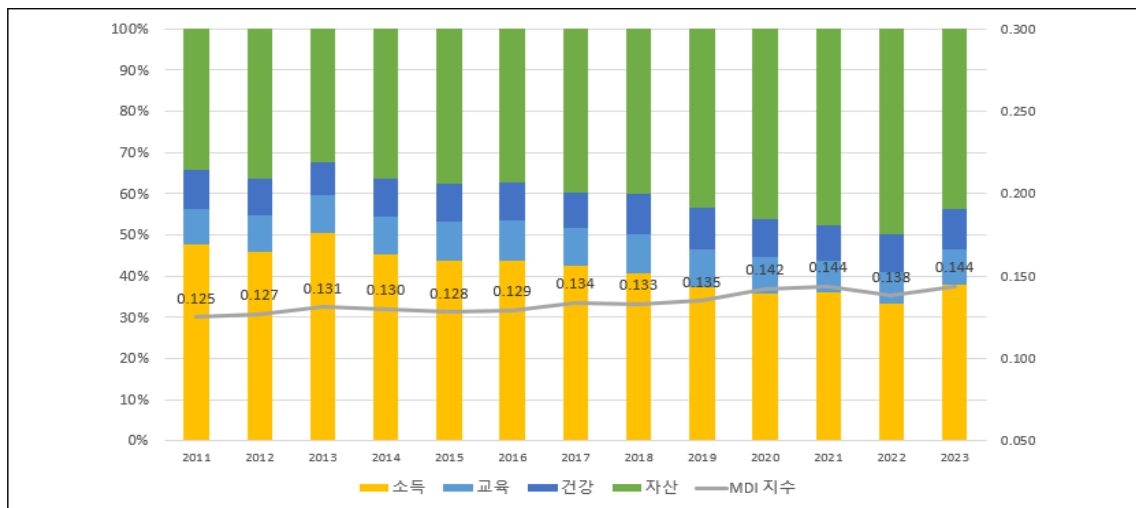
[표 10]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5	0.127	0.131	0.130	0.128	0.129	0.134	0.133	0.135	0.142	0.144	0.138	0.144
소득	47.6	45.8	50.5	45.2	43.7	43.8	42.4	40.7	37.2	35.9	35.9	33.4	38.1
교육	8.7	9.1	9.1	9.4	9.6	9.8	9.3	9.4	9.4	8.9	7.9	7.7	8.6
건강	9.4	8.7	8.2	9.2	9.0	9.0	8.7	9.9	9.9	9.0	8.5	9.2	9.6
자산	34.3	36.5	32.2	36.3	37.7	37.4	39.6	40.0	43.5	46.3	47.6	49.7	4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7]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3) X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X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X세대는 70년대생들이다. 입직 시기에 상당수가 90년대말 IMF 경제 위기를 겪었던 세대다. 나이로 보면, 이 세대의 중간 나이대인 7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36~50세의 연령을 거쳐왔다. 근로연령대의 핵심 기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의 특징 때문에,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X세대에서 가장 분명하게 관찰됐다. MDI 지수에서 소득의 기여도가 48.3%에서 37.7%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산의 기여도는 28.3%에서 42.5%로 대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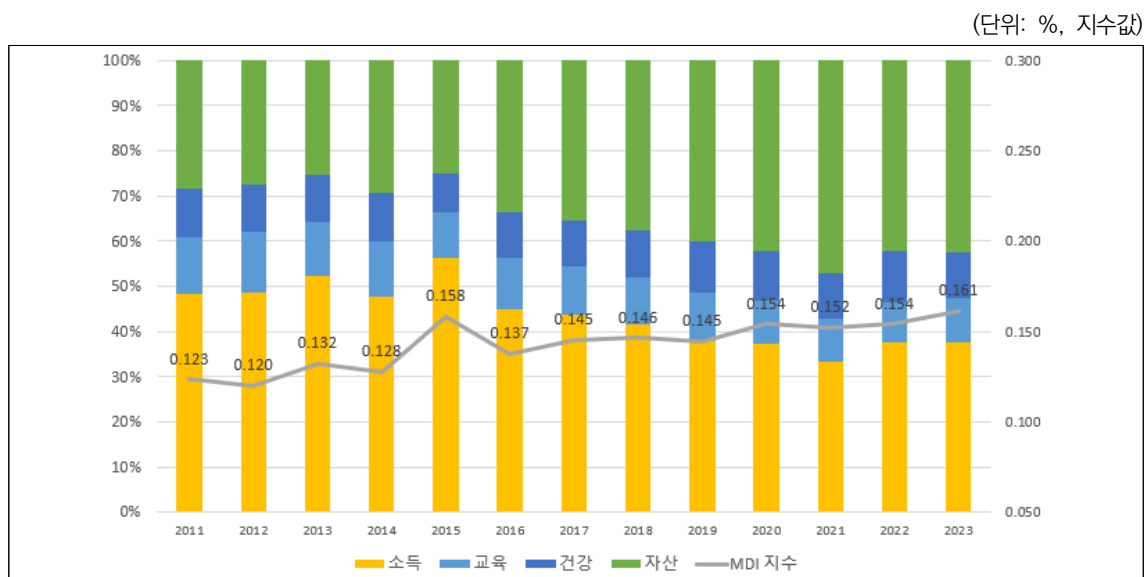
이들 세대에서도 교육 불평등의 기여도는 일부 하락했다. 이들 세대가 초·중·고·대학을 거치는 동안, 한국에서는 교육의 양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M세대에서는 교육의 기여도가 낮게, 변동 없이 유지됐다.

[표 11]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3	0.120	0.132	0.128	0.158	0.137	0.145	0.146	0.145	0.154	0.152	0.154	0.161
소득	48.3	48.8	52.3	47.7	56.4	45.0	43.8	41.5	37.9	37.2	33.3	37.6	37.7
교육	12.5	13.3	12.0	12.2	9.9	11.3	10.5	10.5	10.6	9.6	9.5	9.1	9.6
건강	10.9	10.5	10.4	10.9	8.6	10.1	10.3	10.5	11.4	11.2	10.3	11.3	10.3
자산	28.3	27.5	25.3	29.2	25.2	33.6	35.4	37.5	40.1	42.0	47.0	42.1	4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8]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4) 586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586세대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의 변화 폭이 컸다. 586세대는 60년대생들이다. 세대의 중간 나이대인 6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46세에서 60세로 연령이 바뀌었다. 앞서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자산 불평등의 심화’의 경향도 관찰됐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X세대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건강이 기여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됐다. 교육의 기여도도 13%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의 기여도가

2023년 기준으로 24.2%(노인세대), 13.0%(586세대), 9.6%(X세대), 8.6%(M세대), 6.9%(Z세대)로 점감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반면, 자산의 기여도는 2023년 기준으로 전세대에 걸쳐서 40%를 전후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중이 점증하는 추세도 관찰된다.

[표 12]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51	0.150	0.149	0.160	0.160	0.167	0.164	0.168	0.177	0.174	0.174	0.191	0.188
소득	44.4	46.2	44.5	45.6	41.7	39.6	38.0	37.7	36.7	34.1	33.5	32.2	35.2
교육	13.9	14.2	14.6	13.3	13.6	13.0	13.3	13.5	12.6	13.0	12.2	12.6	13.0
건강	11.9	12.0	12.8	13.1	12.0	12.0	11.9	12.8	12.5	11.6	11.0	12.6	11.9
자산	29.8	27.6	28.2	28.0	32.7	35.4	36.8	36.0	38.2	41.2	43.3	42.6	3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9]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5)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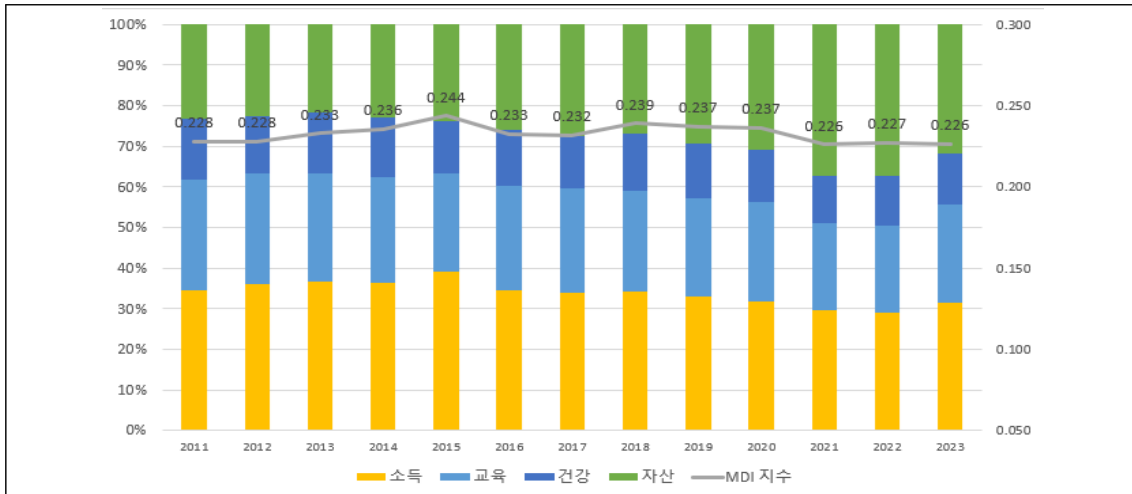
[표 13]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228	0.228	0.233	0.236	0.244	0.233	0.232	0.239	0.237	0.237	0.226	0.227	0.226
소득	34.6	35.9	36.6	36.5	39.0	34.5	34.1	34.2	32.9	31.8	29.7	29.0	31.5
교육	27.1	27.3	26.8	25.8	24.4	25.8	25.7	25.0	24.4	24.4	21.6	21.4	24.2
건강	15.0	14.1	14.9	14.7	12.8	13.8	12.6	13.8	13.3	12.9	11.5	12.3	12.5
자산	23.2	22.7	21.8	23.0	23.7	25.9	27.6	27.0	29.4	30.9	37.3	37.3	3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10]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마지막으로 노인세대를 보겠다. 60년 이전 출생자들이다. 예를 들어, 5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56세에서 70세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다른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MDI 지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점이다.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도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의 3장에서 관찰된 소득 불평등 완화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효과였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의 기여도는 큰 변화 없이 20%대를 유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건강의 기여도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가 고령화를 거치면서 건강 수준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배치된다. 4장에서 노인 집단의 우울감이나 우울장애 유병률에서 노인 집단에서 뚜렷한 완화가 이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횟수가 건강 불평등 변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을 살펴봤다. 201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노동 시장 분배 및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로 상당히 호전됐다. 시장소득의 분배를 급격한 노령화가 악화시켰던 점까지 고려하면(이원진 외, 2022), 한국에서 소득 재분배 완화는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원진 외(2022)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 가구 규모 감소와 같은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통제하면 대체로 2010년대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됐고,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 분배도 개선됐다. 물론, 앞으로도 소득 분배 지

표가 완화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배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대 이후 분배 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정책 및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있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 지정학적 갈등은 대외 환경의 시계를 흐리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교란,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한 충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 불평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보고서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고, 건강한 노동 윤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산 불평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면, 또 자산이 부의 대물림을 낳는 주된 경로가 된다면 건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건강한 복지국가가 성장할 수도 없다. 더욱이, 부모나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Piketty 등의 학자나 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현금 자산의 부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다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시범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용처를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안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즉 데이터가 요구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집적 및 활용에 관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 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 문제의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도 데이터 집적·연계·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누적한 행정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및 활용은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김기태외 2024).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중심에 둔 정책 제언을 아래와 같이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입력 데이터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에서도 “Garbage in, garbage out” 문제가 상시적으로 대두된다. 불평등 현황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행정 데이터가 필수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정제·검증의 표준 운영과 품질관리 전담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데이터 통합·연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연계 여건을 보유하지만, 결합키 활용 제한과 부처 간 소극적 공개 관행이 통합을 가로막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한 행정데이터 수집을 실효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공유를 위한 법·기술·관리 표준을 정비하여 분석과 집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준화·단순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의 테이블은 방대하지만 실제 활용은 일부 칼럼에 집중되어 비효율이 크다. 기관별 상이한 포맷·정의·주기를 정합화하고, 공통 데이터 사전과 인터페이스 표준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보안·안전을 고도화해야 한다. 전수(全數)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위험을 수반한다. 북유럽의 경험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활용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호주의 로보데트(Robodebt) 사례는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의 과신·과의존이 대규모 오류·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기태, 2025). 모델 설계·학습·배포 전 과정의 편향 점검, 설명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사후 모니터링과 중대사고 보고·시정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건강 영역에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정책 제언도 시도하겠다. 첫째,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살펴봤듯,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 변수는 한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어 해석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사회보장정보원, 질병관리청 등이 소득 자료를 연계한다면 조사 표본과 행정자료 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년월일, 성별, 이름을 활용한 결합률이 조사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고 비소비지출(사회보장기여금, 세금)에 대한 자료, 공적이전 소득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파악과 해소가 국가의 주요 아젠다라면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체의 소득 자료를 현재보다 풍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주요 정신건강 지표의 측정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우울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울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바, 국가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강건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생활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표본 규모를 통해서는 연령과 소득, 연령과 지역과 같이 두 가지 범주를 함께 고려하여 건강상태, 건강행태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 규모가 크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고 전국 대표성을 지닌 조사는 아니므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울과 범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풍부히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자료를 풀링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울과 범불안장애가 조사된 연도가 많지 않고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풀링한 자료로는 건강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시계열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점도 첨언해 둔다.

넷째,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연계하여 생산한 자료를 갱신·공개 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2025, 7. 21).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조사에서도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다른 자료들과의 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결합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시도했다. 먼저, 사회 전체의 교육 불평등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각 개인의 최종학력과 해당 학력의 질적 수준(대학순위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현재 한국노동패널(KLIPS)이 유일하게 이를 일부 포함하지만, 교육 불평등의 정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체 사회구성원’보다는 ‘대학입시 불평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관심사는 대학진학 중심이므로, 연도별 불평등 지수는 해당 연도의 대학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결과를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가 유일하였으나, 조사연도의 6-8년 이전 시점 정보만 획득 가능하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종결됐다.

다음으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정밀한 교육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이미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 행정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자료가 필요하다. 향후 교육 불평등 지수 개발은 새로운 조사 구축이 아니라, 기존 행정정보의 활용 체계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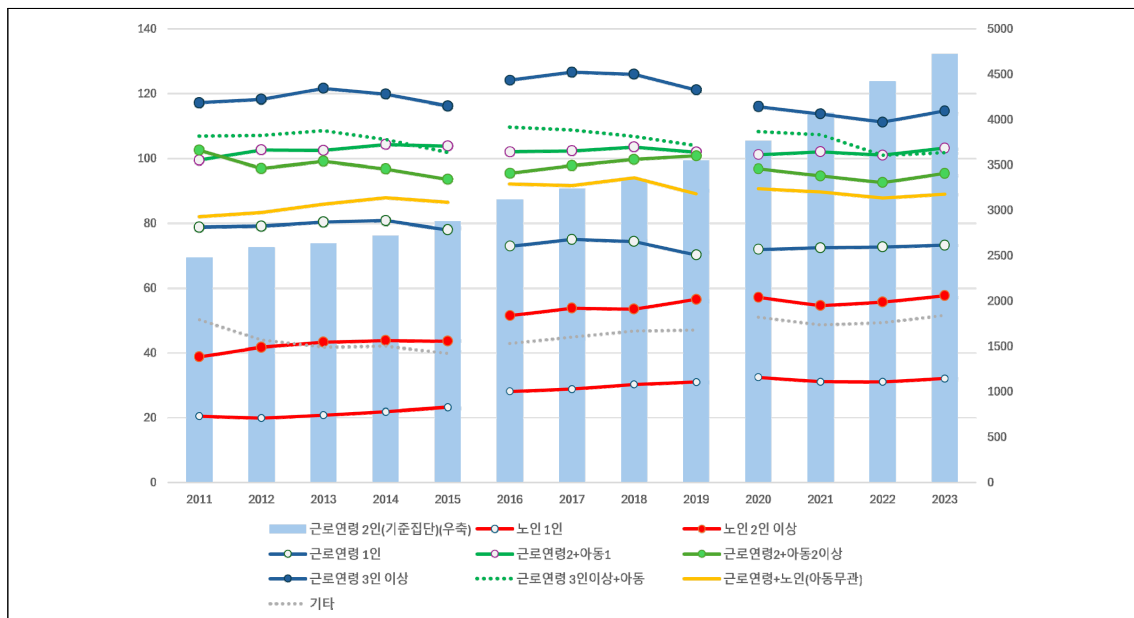
VI | 부록

보고서 안의 차원별 불평등 관련 주요 그림들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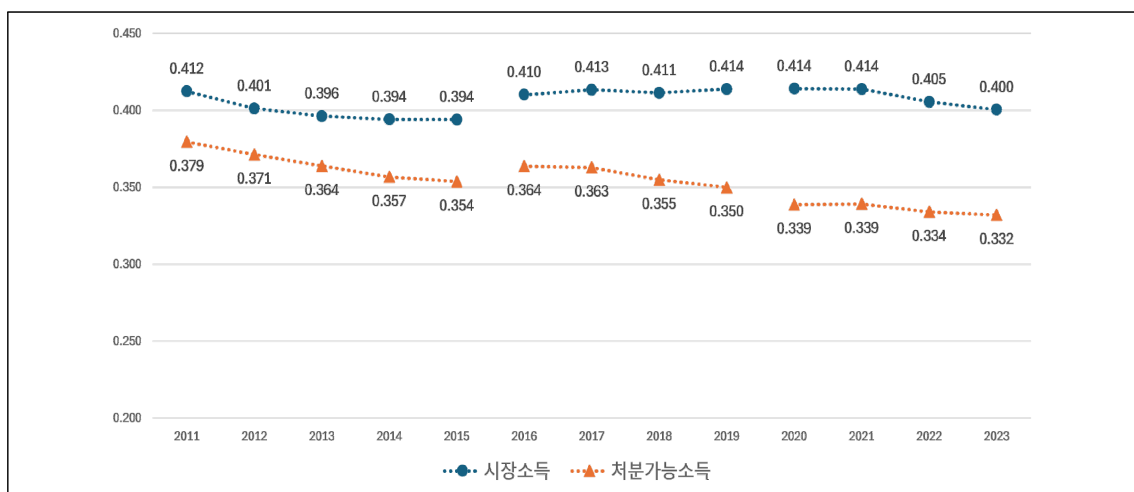
1.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그림 III-1] 가구 유형(세분류)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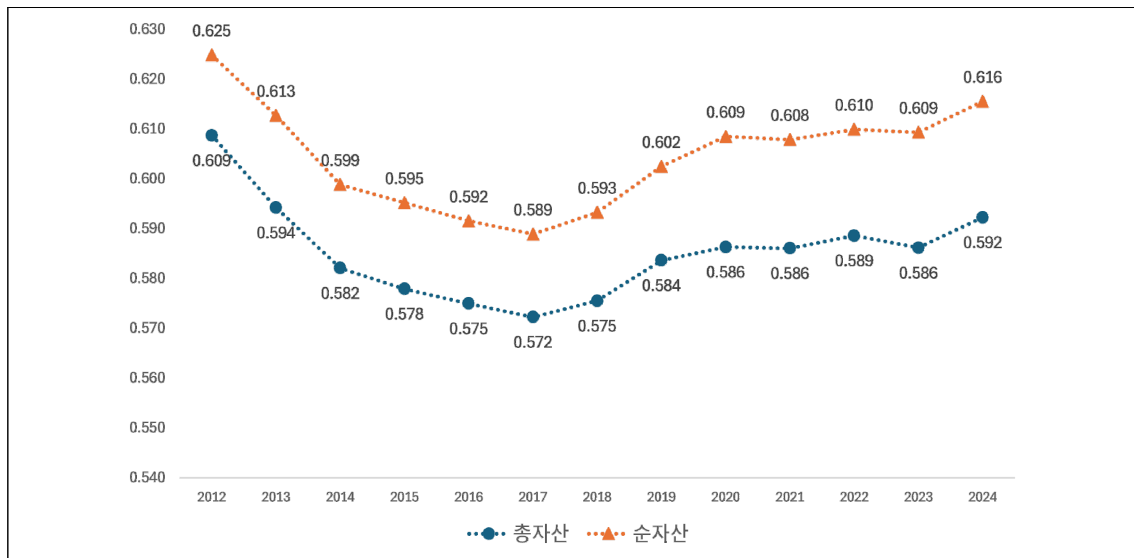


[그림 III-11]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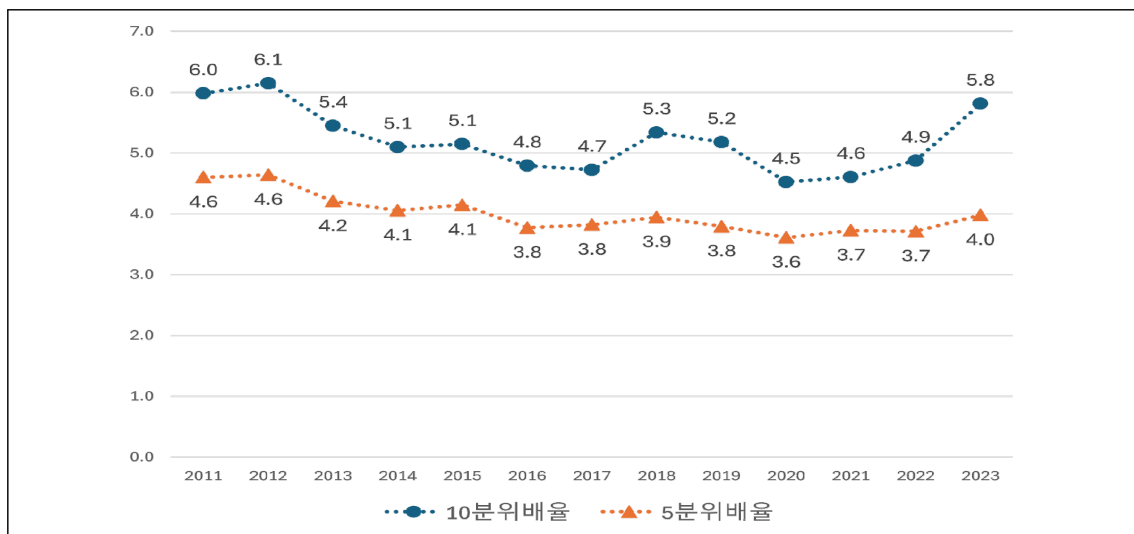
[그림 III-23]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III-28] 소득 분위간 순자산 배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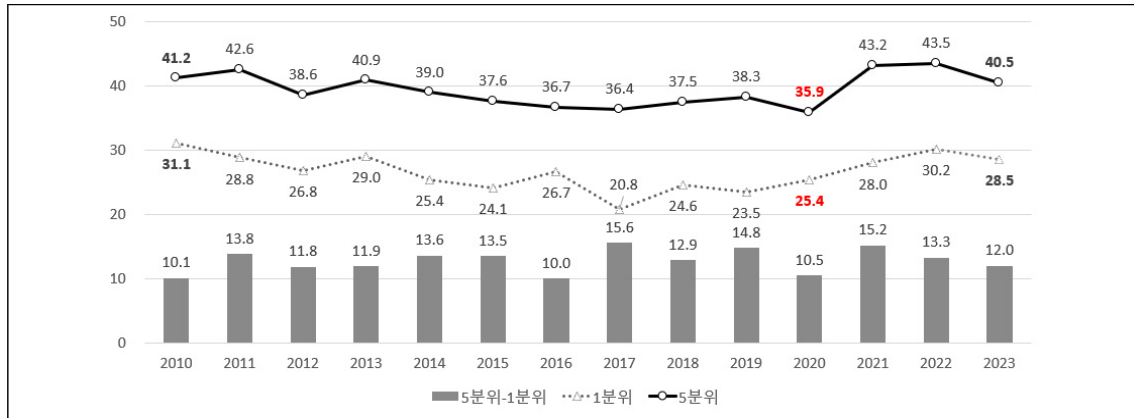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2. 건강 불평등

[그림 IV-3] 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p)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2

[표 IV-12]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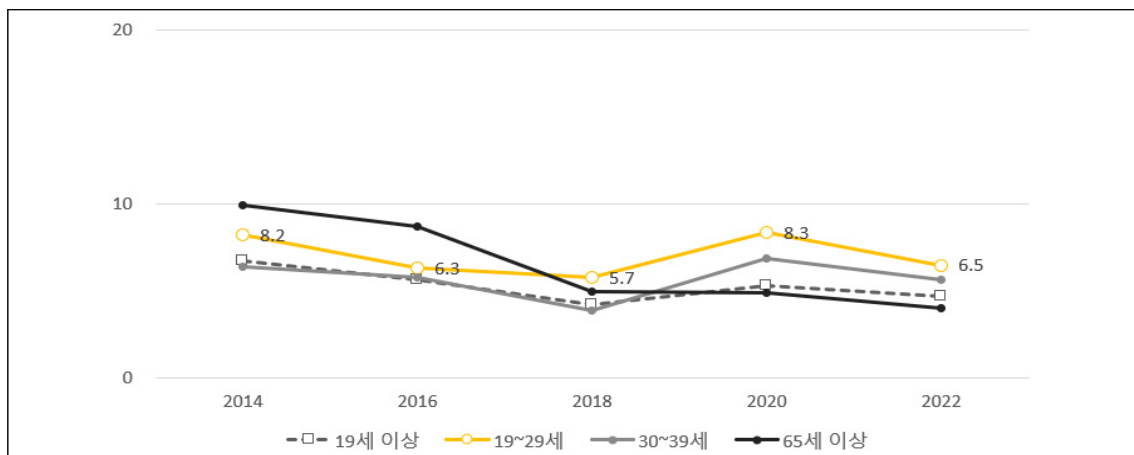
	2014	2016	2018	2020	2022
19세 이상	6.7	5.6	4.2	5.3	4.7
19~29세	8.2	6.3	5.7	8.3	6.5
30~39세	6.4	5.8	3.9	6.8	5.6
65세 이상	9.9	8.7	5.0	4.9	4.0

주: 연령표준화 이전 값임.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IV-14]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표 IV-13]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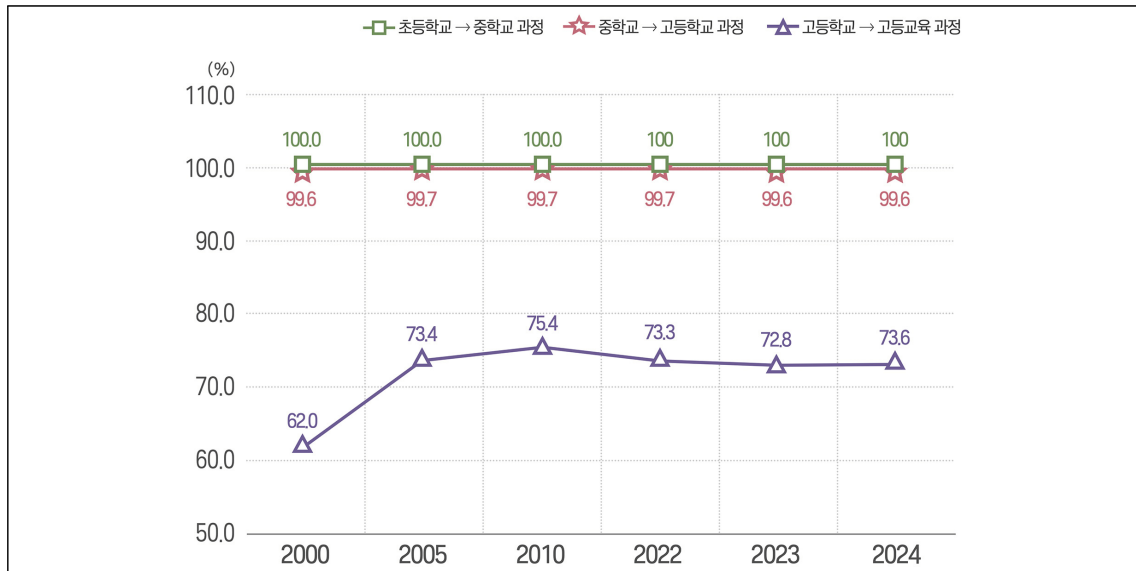
(단위: %)

	2014	2016	2018	2020	2022
1인 가구	14.5	11.8	7.9	10.2	7.9
비1인 가구	6.0	5.0	3.8	4.7	4.2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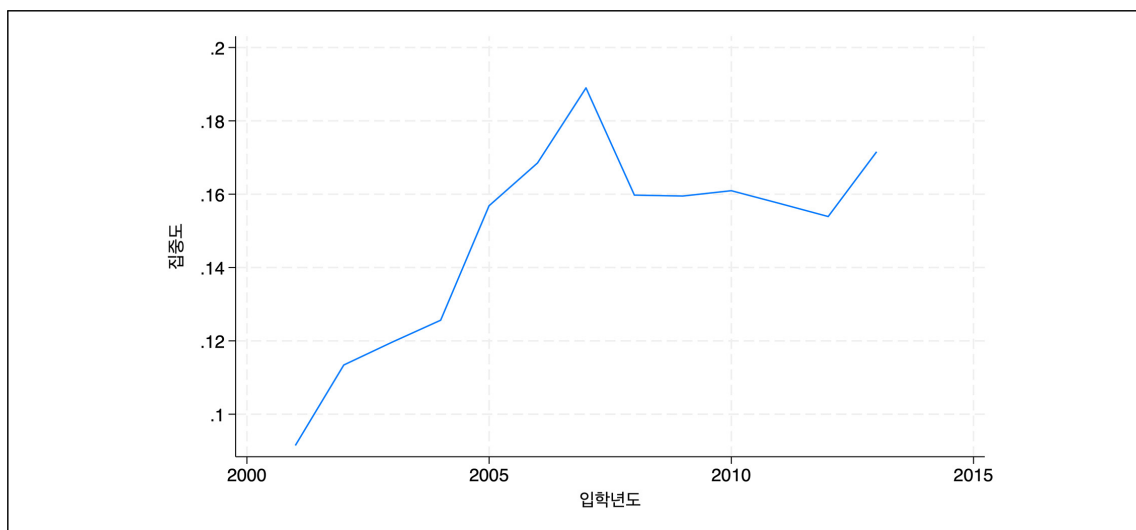
3. 교육 불평등

[그림 V-4] 교육단계별 진학률, 2000-202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1998.

[그림 V-10] 입학년도별 가구소득 기준 대학입학의 집중도





국회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



종합토론

좌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행정학과 객원교수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공공정책대학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김기태 외, 다차원 불평등지수 연구에 대한 토론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 대표
youjs@yonsei.ac.kr

연구의 의의

- 국가가 주목해야 할 불평등 이슈 발굴
-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도서관, 예정처, 조사처, 미래연)
-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네 차원별 불평등과 다차원 불평등지수 개발, 측정
 - 각 차원간 상관관계 및 다차원지수에 대한 기여도 측정
- 핵심 발견
 - 2010년대에 소득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 자산불평등 심화, 다차원 불평등지수 기여도 상승
 -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지수가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높음.
 - 자료의 한계:
 - 소득, 자산은 물론 교육, 건강 등 행정자료들과 조사자료의 연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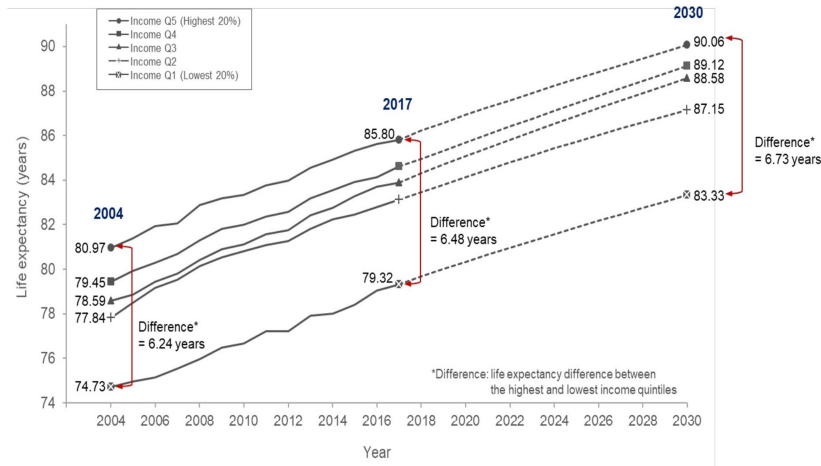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 건강불평등은 주로 주관적 지표와 건강행태를 사용:
 - 건보 데이터의 객관적 지표 이용 필요
 - 소득과 자산 수준별, 교육수준별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 교육불평등은 교육연수 사용:
 - 교육행정 데이터의 질적 지표 이용 필요
- 후속 연구과제
 -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의 불평등 완화/강화 효과 측정
 - 영국 등은 예산안, 법안 제출시 소득계층별 영향 시뮬레이션 첨부
 - 양질의 자료에 기반한 조세-급여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필요
 -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역진적 조세지출, 사회보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 조세개혁, 사회보장 개혁

몇 가지 관련 연구 예시

-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의 격차(Khang et al. 2019):
 -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평균수급기간(연금연령시 기대여명)의 차이(김민혜 외, 2025)
-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불평등 강화 (최혜은, 유종성 2022) vs.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현물급여의 노후소득 불평등 완화(유종성 외, 2025)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
 - 소득기반 고용보험 및 소득기반 국민연금 필요성(유종성, 2025a)
- 공공부조의 소득역전 효과 (유종성 외, forthcoming)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마이너스 소득세/기본소득?
- 역진적 조세지출의 개혁
 - 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 (유종성, 2025b)
 - 근로소득공제의 역진성: 환급형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일원화, 저소득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유종성, 2025)

한국인(남녀 전체)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2004-2017 및 2030까지의 추정



Source : Khang et al.(2019),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기대수명(기대여명) 김민혜, 김은정, 유종성의 건보데이터 예비적 분석결과

age	남성						여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5분위 차	1분위	5분위	차이
0	73.2	80.2	83.7	86.5	89.4	16.2	82.7	92.3	9.6
30	44.5	50.9	54.3	56.7	59.7	15.2	54.3	62.5	8.1
35	40.1	46.2	49.5	51.8	54.8	14.7	49.7	57.5	7.8
40	35.7	41.4	44.6	46.8	49.8	14.1	45.1	52.5	7.4
45	31.7	36.7	39.9	41.9	44.8	13.1	40.5	47.5	7.0
50	27.6	32.3	35.3	37.0	39.9	12.2	36.1	42.6	6.4
55	23.9	27.9	30.7	32.3	35.1	11.1	31.8	37.7	5.9
60	20.2	23.7	26.3	27.8	30.4	10.1	27.4	32.9	5.5
65	16.5	19.6	22.1	23.4	25.8	9.3	22.9	28.1	5.2
70	13.3	15.8	17.9	19.0	21.3	8.0	18.5	23.4	4.8
75	10.4	12.3	13.9	14.8	17.2	6.8	14.4	18.7	4.3
80	7.9	9.3	10.3	10.8	13.3	5.4	10.7	14.4	3.8
85	5.8	7.0	7.2	7.7	10.4	4.6	7.5	10.6	3.1
90+	4.2	5.6	5.3	5.4	8.0	3.8	5.3	7.4	2.1

2022년 기준, 건보의 소득 재산데이터 이용, 재산수준별 분석도 진행
11월 7일, 보건사회학회 발표 예정

노인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에 따른 소득원천별 평균소득 (2020년, 연간, 만원)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배율
근로소득	879	54	182	502	1,089	2,567	47.4
사업소득	406	32	118	298	499	1,083	33.3
재산소득	410	87	159	258	363	1,185	13.6
사적이전소득	155	134	195	202	139	105	0.8
사적이전지출	-84	-41	-45	-79	-97	-159	3.9
시장소득	1,770	273	610	1,185	2,001	4,784	17.5
공적이전소득	794	558	691	745	900	1,077	1.9
공적연금	408	98	206	342	577	817	8.4
기초연금	213	303	287	221	155	102	0.3
세금과 사회보험료	-218	-51	-58	-110	-196	-678	13.4
처분가능소득	2,347	783	1,243	1,820	2,705	5,183	6.6

출처: 최혜은, 유종성(2022).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연금연구)

원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균등화 노인소득 재분배 효과 (2020년)

	지니 계수	개선 효과	5분위 배율	개선 효과	빈곤율	개선 효과	빈곤갭	개선 효과
시장소득	0.555	-	17.5		60.2	-	60.8	-
시장소득 +기초연금	0.48	0.075	8.5	9.0	55	5.2	48.4	12.4
시장소득 +공적연금	0.497	0.058	15.1	2.4	49.2	11.0	54.2	6.6
시장소득 +기초.공적연금	0.432	0.123	8.5	9.1	43.4	16.8	40.3	20.5
가처분소득 -기초.공적연금	0.492	0.116	11.2	4.5	59.1	18.7	54.1	21.9
가처분소득 -공적연금	0.424	0.048	6.4	-0.3	53.1	12.7	42	9.8
가처분소득 -기초연금	0.436	0.06	10.6	4.0	47.3	6.9	46	13.8
가처분소득	0.376	-	6.6		40.4	-	3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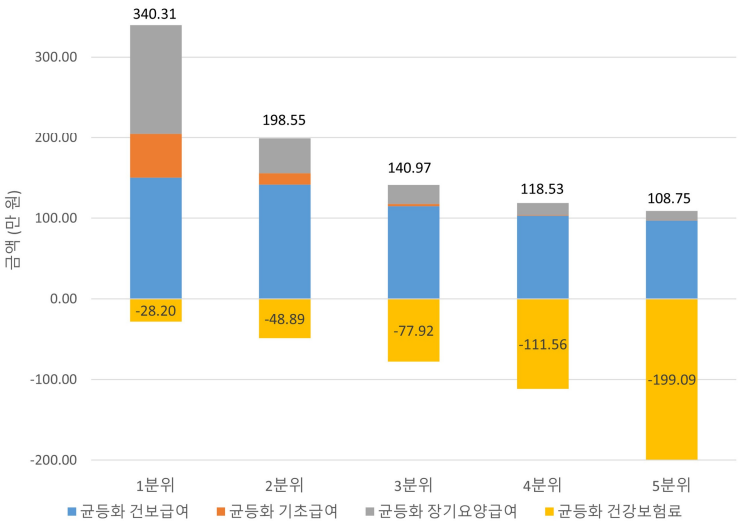
출처: 최혜은, 유종성(2022).

노인 균등화가처분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지니계수 요인분해)

	소득 비중	지니계수	지니상관계수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근로소득	0.375	0.748	0.769	0.216	0.572
사업소득	0.173	0.849	0.624	0.092	0.243
재산소득	0.175	0.805	0.654	0.092	0.244
사적이전소득	0.662	0.748	-0.074	-0.004	-0.010
사적이전지출	-0.359	-0.760	-0.361	-0.010	-0.026
공적이전소득	0.339	0.367	0.351	0.044	0.116
공적연금	0.174	0.690	0.527	0.063	0.168
기초연금	0.091	0.403	-0.507	-0.019	-0.049
세금과 사회보험료	-0.093	-0.722	-0.780	-0.053	-0.139
가처분소득	1.000			0.3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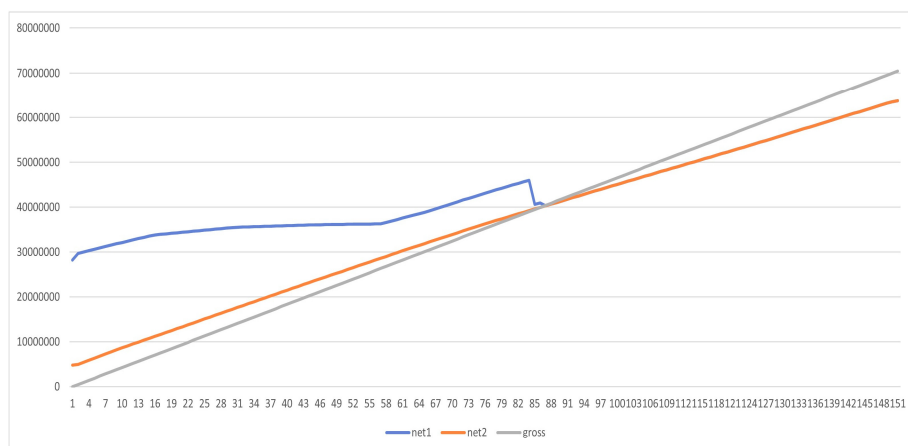
출처: 최혜은, 유종성(2022).

소득분위별 균등화의료현물급여 및 건강보험료 분포



출처: 유종성, 안성준, 이승주(2025), “가금복-건보 가명정보 결합자료 이용 의료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홀벌이 부부와 두 자녀 4인가구의 총근로소득(평균 임금의 %)에 따른 세후 순소득(가처분소득)



net income 1 (아동.양육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

net income 2 (아동.양육수당만 수급).

출처: 유종성, 강남훈, 이승주(forthcoming),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역전: 2021년 균등화가처분소득(귀속임대료 포함) 10분위중 1분위

소득수준	수급여부	인원 비중(%)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1분위 (10분위 중)	수급자	31.8%	2,509	11,709
	비수급자	68.2%	5,459	10,984
2백만원 미만	수급자	18.1%	268	10,335
	비수급자	11.4%	624	8,462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수급자	6.6%	3,363	12,152
	비수급자	17.3%	3,577	9,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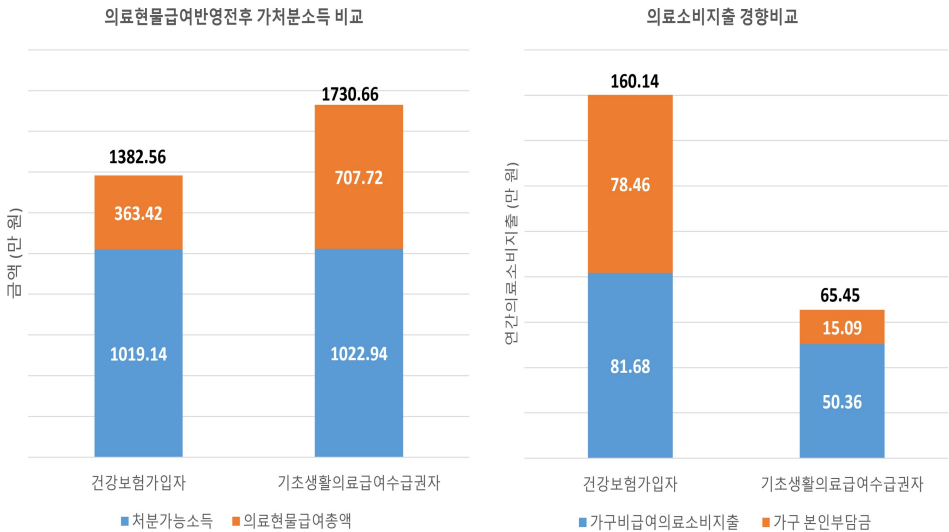
출처: 유종성, 강남훈, 이승주(forthcoming),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안심소득 실험 참여가구의 공적 자료 및 설문조사 응답 상의 근로·
사업소득과 가처분총소득 비교 (단위: 월 천원)

	근로·사업소득			가처분총소득		
	공적자료	설문응답	차이	공적자료	설문응답	차이
전체참여가구	513	739	226	847	1,418	571
수급 가구	485	577	92	1,061	1,263	202
비수급 가구	530	838	308	717	1,513	796
근로 가구	956	1,106	150	1,209	1,643	434
수급	1,013	1,021	8	1,458	1,600	142
비수급	927	1,148	221	1,074	1,664	590
비근로 가구	0	314	314	435	1,159	724
수급	0	168	168	696	954	258
비수급	0	423	423	241	1,311	1,070

- 출처: 유종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사례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11.
(정은하,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6~37쪽의 표들을 토대로 재구성)

소득 하위 20% 내 의료현물급여의 소득 역전 효과



출처: 유종성, 안성준, 이승주(2025)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이를 보편적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수준별 혜택 비교

	인원	근로소득 공제 (만원)	감세액 (만원)	근로소득세 액공제인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만원)	감세액계 근로소득 자담만원	보험료 지원 (만원)	감세총액 (억원)	보험료 지 원총액 (억원)
총급여 구 분별	20,795,349	989	158	18,840,811	43	197	191	409,920	396,713
결정세액이 있는자	13,964,590	1,160	206	13,958,971	51	257	218	359,012	304,062
1천만 이하	12-	-	-	0	-	-	49	-	0
1.5천만 이하	169,973	7,215	43	169,968	17	61	157	1,029	2,671
2천만 이하	806,641	790	57	806,636	24	81	194	6,534	15,655
3천만 이하	2,827,082	904	112	2,827,060	40	152	220	42,981	62,196
4천만 이하	2,364,773	1,048	155	2,364,756	62	216	220	51,170	52,025
4.5천만 이하	1,000,025	1,162	174	1,000,015	63	237	220	23,690	22,001
5천만 이하	884,923	1,212	182	884,907	63	245	220	21,700	19,468
6천만 이하	1,460,623	1,249	187	1,460,598	65	252	220	36,820	32,134
8천만 이하	1,924,293	1,321	236	1,924,244	59	295	220	56,680	42,334
1억 이하	1,134,653	1,420	336	1,134,597	50	386	220	43,791	24,962
2억 이하	1,213,735	1,535	476	1,212,627	34	510	220	61,839	26,702
3억 이하	112,513	1,749	665	110,664	20	685	220	7,576	2,475
5억 이하	44,681	1,964	786	43,318	20	806	220	3,491	983
10억 이하	15,863	2,000	840	15,031	20	860	220	1,293	349
10억 초과	4,800	2,000	900	4,550	20	920	220	419	106
결정세액이 없는자	6,830,759	640	61	4,881,840	20	75	136	50,908	92,651

출처: 유종성, 2025a, “국민연금의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개혁 방안”(사회보장연구)

원자료: 2024년 국세통계연보 4-2-4 (2023년 소득 기준)

과세표준별 세율, 납세자 및 기본공제 인원, 기본공제의 감세효과, 기본공제를 25만원 지원금으로 전환할 때의 순수혜(순기여) 금액, 2023년 소득 기준

과세표준	세율(지방소 득세 포함)	해당 납세자 (천명)	기본공제 인원 (천명)	기본공제 인구비중	150만원 기본 공제 감세(원)	25만원 지원금 순수혜(원)
0	0	2,289	2,382	4.6%	0	250,000
1.4천만 이하	6.6%	11,282	14,419	27.9%	99,000	151,000
5천만 이하	16.5%	10,123	17,596	34.1%	247,500	2,500
8.8천만 이하	26.4%	1,990	4,937	9.6%	396,000	-146,000
1억5천만 이하	38.5%	722	2,006	3.9%	577,500	-327,500
3억 이하	41.8%	240	614	1.2%	627,000	-377,000
5억 이하	44.0%	56	133	0.26%	660,000	-410,000
10억 이하	46.2%	27	61	0.12%	693,000	-443,000
10억 초과	49.5%	9	20	0.04%	742,500	-492,500
계 (명, 억원)		26,737	42,168	81.7%	94,257	11,163
기본공제 비대상 (명, 원)			9,432	18.3%	0	250,000
전체 인구 (명, 억원)			51,600	100.0%	94,257	34,744
전국민 지급 총액 (억원)						129,000

출처: 유종성, 2025b,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프레시안, 6. 18)

원자료: 2024년 국세통계연보(2023년 귀속소득) 3-1-4, 3-1-7, 4-2-6

결론

- 국회의 정책기능 지원을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의 불평등 및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
- 예산안과 법률안의 소득분배 영향 시뮬레이션 첨부 의무화
 - 연금개혁 등 재정추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후소득 분배효과 추정
- 양질의 조세-급여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필요:
 - 전문가는 물론 국회의원 보좌진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수십년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 제도 유지시 및 조세 및 사회보장 개혁안들에 따라 나타날 재정 및 정책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 사회보장통합행정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험 데이터와 소득, 재산, 교육, 고용의 핵심 데이터 표준화 전수 패널 구축, 개별 데이터와 지자체 데이터 실시간 연계 가능하도록
 - 핀란드의 전국민 의료 및 복지 데이터 통합 계획(2027 완성) 참고
 - “Public data for public good” 원칙과 세부 기준의 확립: 사생활 보호와 공공데이터 공익적 활용
 - 민감 데이터 기준, 산업 활용의 허용 기준 및 초과이윤 환수(데이터세?)

토론문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공공정책대학 교수

1. 불평등 연구와 의미와 성과

이 발표문은 불평등 지수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제공하고 새로운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개발을 시도한 연구로 새로운 의의가 있어, 향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inequality)은 사회의 자원이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가리킨다.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불평등을 구분할 수 있다. 사회학자 예란 테르본에 따르면, '생명 불평등'은 출생, 사망, 건강 상태의 불평등을 가리키며, '실존적 불평등'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 사회적 관계에서 지위와 인정의 불평등을 포함하며, '자원의 불평등'은 경제적 소득, 재산,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을 의미한다(Therborn, 2013).

199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상위 1%, 10% 소득 집중은 급증했다. 지나친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산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없애며, 많은 사람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Wilkinson and Pickett, 2019).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 갈등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협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Bartells, 2016).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치 양극화와 극우, 극좌 포퓰리즘의 증가는 불평등의 심화가 깊은 관련이 크다는 연구가 많다(Levitsky and Ziblatt, 2024).

‘불평등’은 사회과학의 고전적 주제이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와 2014년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출간 이후 관심이 커졌다.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켓의 <평등이 문제다>, 앤서니 앳킨슨의 <불평등을 넘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 이매뉴얼 사에

즈와 게이브리엘 저크먼의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의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서도 전병유 등의 〈한국의 불평등, 2016〉, 전병유와 신진욱의 〈다중격차〉에 이어 구인회, 김낙년, 김태완, 김창엽, 이성균, 이철승, 최성수, 변수용 등 여러 학자의 연구도 발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커진다는 주장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중요한 의제를 삼지 않는 ‘불평등 침묵’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단순다수대표제에서 국회가 불평등 감소에 소극적이며 저소득층 투표율이 낮아진다.
- 불평등이 만든 초저출산, 자살, 불행감, 사회문제를 외면하는 ‘문화적 부인’이 심각하다.
-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크지만, 정부에 역할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2. 불평등의 측정과 지표

불평등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와 자산 불평등 자료가 가장 널리 활용된다. 앳킨슨, 팔마, 센 등 여러 학자들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이외에도 소비, 문화, 건강, 주거, 노동, 기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생산자보다 소비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소비 불평등**은 개인과 집단의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자동차, 쇼핑, 해외여행, 관광, 외식, 여가의 불평등은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체감을 증폭시켰다.

주관적 계층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소속감은 1980년대 후반 80% 수준에서 최근 55%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는 중위소득 70%~200% 기준 중간소득 계층이 약 65%인데 비해 낮은 편이다.

불평등의 **사회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 연령, 세대, 젠더, 성, 지역, 민족 등 다양한 사회적 기준에 따른 불평등도 중요하다. 건강, 보육, 문화, 신뢰, 환경 등 질적 차원의 불평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사회 정의에 대한 전통적 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

다. 이에 비해 악셀 호네스는 인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인정 패러다임은 문화주의적 관점을 강조하고 불평등하게 가치 평가된 **정체성**에 주목한다(낸시 프레이저, 악셀 호네트, 2014).

3. 소득 불평등의 다차원성

현재 학계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표는 **지니계수**, **5분위와 10분위 배율**, **상위층 1%와 10% 소득 집중**이다. 이외에도 상대 빈곤율, 빈곤 갭, 저임금 노동자 비중 등 지표도 참고할 수 있다.

- 지니계수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지니계수는 사회 전체의 소득 분포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성, 청년, 노인 등 특정한 인구 집단의 비교는 어렵다.
- 5분위, 10분위 배분율은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상위 10%와 하위 40%를 대비하는 팔마 비율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 등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도 팔마 비율의 활용을 적극 지지했다.
- 상위층 1%와 10%의 소득과 자산 집중도의 측정을 통해서도 상위층 집중 등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납세 통계를 활용한다. 이 방법은 소득 불평등이 중위 소득과 상위 소득의 격차 확대에 의해 발생했을 때 불평등 변화 측정에 효율적이다. 하지만 불평등이 소득 상층에서보다는 빈곤의 확대 등 소득 하층에서 발생하면 변화 측정에 효율적이지 않다.
- 한편 빈곤층의 범위와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OECD와 유럽연합(EU)은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 갭을 활용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최하위 소득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사실은 불평등이 빈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노인 빈곤율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 값을 산출할 때 평균을 보여줄 것인지, 집단간 격차를 보여줄 것인지,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여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OECD에서도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관련 불평등 지수 가운데 지니계수는 평균의 관점, 소득 5분위 배율, 팔마 비율 등은 그룹 간 비교의

관점, 상대적 빈곤율은 취약계층의 관점에 따른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와 10분위 또는 5분위 배율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상대적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소득 1%, 10% 집중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구 소득 조사와 개인 소득 조사 결과도 다르다.

한편 한국의 공적 이전 이후 불평등 감소 효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낮은 조세 부담율과 공적 사회지출 비율이 불평등을 감소하지 못한다.

현재 불평등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학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양한 측정 방법에 따라 불평등은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불평등의 다차원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윤태, 2022).

OECD Better life index(11개 영역 49개 지표)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11개 영역 71개 지표)는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개인, 사회, 환경적 차원의 11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마다 세부 지표를 공표 및 모니터링 하고 있다. 다차원적 불평등 또한 개인,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다차원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값으로 단일한 지수가 나온지, 개별 지표 값을 관리하는 것이 나온지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지수 값으로 산출하는 것은 명료하게 보여 줄 수 있으나, 하위 구성 지표들 사이 구성의 적합성, 향후 지표 개별 지표값의 가중치 구성에서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

발표문은 지니계수 하나의 측정 단위를 사용했으나 지표가 확대될 경우 각 지표마다 다른 측정 단위가 사용될 수 있다(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만족도 등). 각 지표 값의 변화를 지수로써 어떻게 가중치를 반영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서 단일 지수보다 지표 값의 모니터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불평등을 다차원성을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다차원적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처럼 단일한 기준에 의한 한 국가의 통시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공시적 비교에 활용될 수 있으나, 개별 국가의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 있다. 국가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서는 개별 하위 계열의 불평등 측정이 정확성이 더 시급하다.

3. 자료 수집 방법의 이슈

발표문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복지패널’이라는 단일의 조사를 통해 구성되었는데, 단일의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 값을 산출하면 지표들간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표의 적절성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복지패널’ 조사에서 산출한 소득, 교육, 건강, 자산 지표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소득, 교육, 건강, 자산을 대표하는 값인지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소득, 자산 관련 통계는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건강은 ‘국건영’ 자료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현재 한국은 소득 불평등의 다면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 자료가 연구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가구 단위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초기에는 가구주 외 가구원의 개인 소득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개인 소득도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설문에서 개인 소득도 파악한다. 그러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https://mdis.kostat.go.kr/>)에 일반 공개된 자료에서는 개인 소득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Research Data Center, RDC)에서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개인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원격접근 서비스(RAS)”나 “이용센터 서비스(RDC/SDC)” 등 인가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한 후에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등 타 국가는 서베이에서 파악된 개인 소득을 일반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데이터 서비스다.

소득 자료의 부족은 소득 불평등 변화 원인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원인을 모르니 대책 마련도 어렵다.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을 모두 파악하는 일반 공개된 자료로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자료가 있다. 하지만 공식 소득 불평등 파악에 쓰이는 자료가 아니고, 소득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질문 내용이 많아서 소득 자료의 품질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패널 콘디셔닝(panel conditioning)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문제도 있다(Halpern-Manners and Warren, 2012). 패널 조사에서 탈락되는 응답자와 유지되는 응답자가 있는데, 고용이

유지되고 소득이 상승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패널 조사에 더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이 때문에 패널 자료는 불평등 변화를 과소 추정하는 위험이 있다(김창환, 2022).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 분석 자료로 가계 소득 통계를 주로 활용하지만, 상당수 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방법의 한계 때문에 국세청 납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피케티의 상위층 1%, 10%의 소득 집중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대표적이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동료들의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가 대표적이다.

물론 국세청 납세 자료 역시 완전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층 소득 집중은 더 클 수 있다.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 소득 과소보고가 우려된다. 세금 자료에서 상당 부분의 소득이 실제 신고가가 아니라 추정치이다.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사적 이전소득은 서베이 자료로만 파악 가능하다. 고소득자는 국세청 자료가 서베이에서 조사된 소득보다 높지만, 저소득자는 국세청 자료보다 서베이 자료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 ‘평균 전환 오차’라고 부른다(Kim and Tamborini, 2012). 이 때문에 고소득 임금노동자의 소득은 세금 자료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서베이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여겨진다(김창환, 2022).

그래도 세금 기록은 공식적인 행정 자료이므로 개인의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보다 객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파리경제대학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의 토마 피케티와 동료들은 세금 데이터 외에 국세청, 부유층 데이터(포브스), 설문조사 데이터 등을 혼합해 보강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려 시도한다.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도 현재 한국 불평등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

-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한 사회 전반 불평등 수준이 높다.
- 납세 통계로 본 상위층 소득 집중이 커지고 있다.
- 젠더 불평등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 자산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유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 조세 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이 낮아 공적 이전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적다.

4. 연구의 향후 과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자료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비싼 세금을 사용하여 높은 품질의 자료를 만들었지만, 자료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연구자에게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면에서,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파악하는 면에서,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김창환, 2022).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가장 쉽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자료의 공개이다. 자료를 공개해 소득 불평등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소득 분배가 필요할 때 더 효율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없이 집행할 수 있다.

통계 자료의 투명성.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전국민 소득 정산 보고서가 공공자료로 공개되어 있다. 누구나 원하면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자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의 소득은 거의 모두 (비밀이 요구되는 일부 공무원은 제외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도 카운티별로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김창환, 2022). 이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득도 모두 공개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서베이의 개인 소득을 연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납세 통계. 상위 1%와 10% 등 소득 집중 분석을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외에 국세청 납세 통계를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개방해야 한다. 대기업 임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소득과 납세 기록은 철저하게 공개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생명 불평등. 출산, 사망, 건강, 자살률이 소득 계층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출산율, 기대수명이 낮고, 질병 발생과 자살율이 높은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행복 불평등. 유엔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감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또한 주관적 삶의 만족 또는 행복감 수준이 소득 계층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왜 저소득층이 행복감이 낮은지 인구집단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안나 카레니나 효과’)

사회 이동성 통계.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을 비교하는 소득 이동성 연구는 사회이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개인별 소득 통계 등 **사회 이동성** 자료의 공개와 활용이 중요하다(‘위대한 개츠비 곡선’).

젠더 불평등. 소득, 자산 지표 이외 채용, 승진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유리 천장 지수’).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 노동시장의 범주적 구분에 따른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불평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성 대 여성, 중장년층 대 청년층, 국내 노동자 대 이민 노동자 등 인구학적 구분에 따른 불평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생애사의 문제라기보다 주로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불평등 이슈다.(노동시장 이중화와 분절화)

교육 불평등. 양적 지표 (부모와 자녀의 학력 수준과 교육 기간) 공개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계열별 진학률 (특목고, 과학고 등), 상위권 대학 진학 등 질적 지표가 공개한다. 교육 불평등 질적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별 학생과 부모의 소득 통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교육 사다리 지수’).

의료 불평등. 기대 수명 등 양적 지표 이외 주관적 건강, 정신질환, 스트레스, 삶의 질의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불평등. 전 세계적으로 부모의 자산, 부동산 뿐 아니라 인맥,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취향의 **사회적 세습**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인맥, 네트워크, 학벌 등 **사회자본**과 문화적 취향의 위계와 관련된 **문화자본**의 불평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영국 BBC Social Class Survey; Mike Savage, *Social Class in the 21st Century*, 2015; 샘 프리드먼, 대니얼 로리슨, 〈계급 천장〉, 2024).

5. 결론과 제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개발은 학술적, 국제 비교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별 하위 지표 가운데 질적 지표, 사회 이동성 지표가 더 충실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 공개와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빈곤 추방과 **불평등 감소** 없이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투자로 초저출산, 노인자살, 높은 불행감, 낮은 사회적 신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사회보장, 조세 정의(불평등과 누진세의 자동연계), 공적 사회지출 확대, 공교육과 사회 투자,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확대, 여성 친화적 사회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선거제도 개혁과 합의 민주주의 강화 등 **근본적 사회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

1942년 전쟁 시기에 영국 의회가 초당적 기구를 결성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사회보장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해 영국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룬 것처럼, 지금은 불평등과 기후 위기와 해결하는 ‘한국형 베버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문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해방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던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누구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가난이라는 현실을 벗어나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았던 과거, 노력은 성공의 보증수표였으며 고성장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고 사회이동 개방성이 높다고 평가된 한국 사회(차종천, 2002; Park, 2003; 신광영·조돈문·조은, 2003)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확보는 국가 발전에의 원동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하였다는 논의가 대두되었고, 계층 ‘고착화’ 및 ‘재생산’에 관한 사회적·학문적 담론과 연구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계층 재생산에 천착한 연구들은 주로 통계적인 분석에 따라 부모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이 자녀의 학업과 취업, 소득, 그리고 결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인 기저에서 작동하는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과 같은 비가시적이지만 계층 재생산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제를 찾아내려는 작업 역시 수행되었다. 현실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계급 재생산 및 불평등의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개천 용’은 사라진 지 오래고, ‘수저론’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지고 계급 문제가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이후의 사회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불평등 양상을 구체적인 지수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으로 특정 현상을 측정하고 그 현상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그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정책적 수단의 결과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지수 자체를 넘어서 객관적인 지수를 통해 비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와 지역, 사회, 국가 수준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 불평등 문제를 다차원적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계층 형성 및 변화 과정이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겪어온 제도적이고 문화적 차원에서 변화들과 어떻게 교차하며 나름의 역동을 만들어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의 모형 및 검증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자체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주요 자료 집적에 기여하고, 점차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상승 이동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문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으로 불평등지수가 좀 더 정책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에 불평등의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물론, 이미 언급한 대로 불평등 내용의 다차원성 혹은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사회체계가 지속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의 전이 뿐만 아니라 다세대 간 불평등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직도 교육 수준이나 소득 등의 측면에서 부모-자녀 세대 간에 높은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계급 고착화 현실과, 사회 이동 개방성을 주장하는 최근 연구들 사이의 이 같은 ‘격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것은 2010년 초반 등장한 <새로운 성공의 요건>이다. 이 담론의 핵심 논지는 “요즘 태어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부모의 뒷받침과 자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축적한 부가 손자녀의 계층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조손 증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 역시 부모-자식 간의 상속을 넘어 조부모가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불평등 연구에서 ‘다세대 계층 이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의 재력과 같은 3세대 이상의 누적된 자원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는 윗세대로부터의 지연된 영향력은 2세대 연구만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압축적인 성장을 거치며 다른 사회보다 조밀하고 복잡다단한 계층 이동 패턴과 메커니즘을 갖게 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급 재생산 및 불평등 문제를 포함한 계층 이동 연구에 대한 다세대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단일 세대 혹은 2세대 관계 속에서 계층 이동 문제를 다루어 왔다. 점차 세대 간 이동성이 약화하고 경직된 계층 구조가 굳어지는 데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확장된 스펙트럼 속에서 더 긴 호흡으로 현실의 변화를 연속성 있게 고찰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문제와 동시에 이론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대체로 지수를 구성할 때 자료를 크게 객관적 자료(hard data) 혹은 주관적 자료(soft data)를 사용한다. 물론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전자가 대규모 행정 혹은 통계 자료에 근거하지만 후자는 사회조사 자료에 기반한다.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통계에 기반하여 객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수 체계 내에서 질적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측정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가 가능하지 않아서 객관적 자료 산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객관적 자료의 품질과 수량의 문제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주관적 자료를 일정 부분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와 관련한 방법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불평등이라는 현상 자체가 절대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대적 요소를 포함한다. 실제로 많은 불평등지수나 지표가 이러한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사회 과학자들은 경제적 보상이나 만족을 논의하는데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 정도를 인지하거나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경제적 보상 정도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Major and Deuax, 1982; Alwin, 1987; Jasso, 1999). 자신들이 받는 경제적 보상을 객관적인 투자나 공헌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평등의 문제를 절대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것이다(Jasso, 1978; Alwin, 1987; Arts and Wijck, 1991).

마지막으로 각종 지수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수를 학술적으로나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유사 지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활용하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지수가 체계의 결함보다는 활용의 한계로 인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공적 부문에서는 법적 근거가 가장 주요하고, 사적 부문에서는 마케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신광영·조돈문·조은. 2003.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 차종천. 2002.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추세: 1990-2000.” 『한국사회학』 36(2): 1-22.
- Jasso, G. 1978. “On the justice of earnings: a new specification of the justice evaluation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1398-1419.
- Jasso, G. 1999. “How much injustice is there in the world? Two new justice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133-168.
- Park, Hyunjoo. 2003. “Intern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0: 227-253.

토론문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MEMO

MEMO

[illegible]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

